



“우리나라 모든 중소기업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선진국하면 미국, 독일, 일본 등을 떠올립니다. 이들 나라를 선진국으로 꼽는 것은 커다란 국부, 높은 국민소득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강한 중소기업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란 국정비전과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의 국정목표를 가지고 ‘중소기업의 성공 희망 사다리’를 놓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청도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에 이르는 원활한 생태계 조성으로 중소기업의 성공과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고자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건전화 방안”, “중소기업 재도전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부딪치는 재무, 회계, 마케팅, R&D 등 다양한 경영애로를 해소해 주고자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지방중소기업청에 배치하여 상담은 물론 기업현장에 직접 나가 애로를 해결해 주는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천번의 두드림, 기업성공 안내서」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비즈니스지원단에 상담 요청한 내용 가운데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들을 모아 창업, 금융, 기술, 판로 등 10개 분야별로 100개 내외의 문답으로 엮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로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중소기업인들께서 ‘천번의 두드림, 기업성공 안내서’를 늘 곁에 두고 활용하시어 모두 성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e-book이 발간되도록 많은 애정과 열정을 보내주신 비즈니스지원단 집필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표하며 모든 중소기업인들의 성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4년 1월

중소기업청장

한 정 화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소개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이란 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해 각 지방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경영지도사, 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의미합니다.

➔ 종합상담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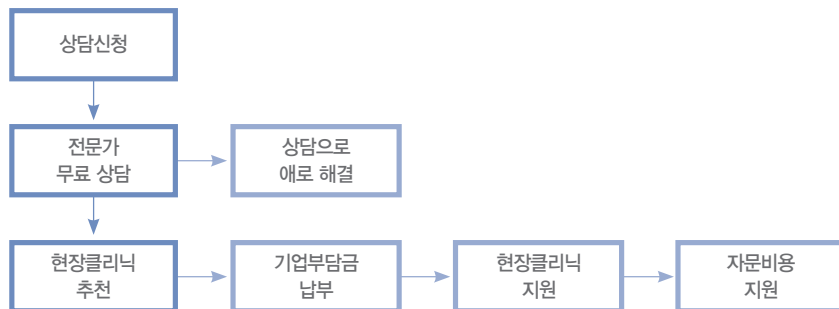
비즈니스지원단의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무료로 상시 상담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 현장클리닉이란?

비즈니스지원단의 종합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해당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이내)에 애로를 해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현장클리닉 비용은 정부 70%지원, 기업 30% 부담

➔ 지원절차




④ 신청방법(연중 수시)

방 문 : 비즈니스지원단
(11개 지방청 전문가 대기)



인터넷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 화 :  1357 콜센터(☎1357) 또는 각 지역별 비즈니스지원단



기 관 명	상담 전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1~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831-13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	052-283-0340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7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7~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805~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031-820-9001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2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48~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8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041-564-38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25~6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06~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3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46~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C o n t e n t s

발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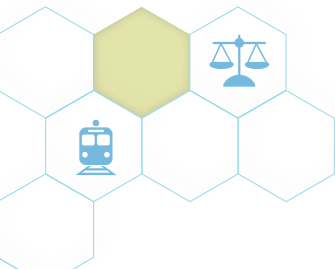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소개

I. 기술·특허 상담사례

1. 기술기획	16
2. 기술개발	23
3. 기술인증	37
4. 기술사업화	52
5. 특허	60
6. 상표	97
7. 디자인	106
8. 저작권 기타	113

II. 중소기업 현장클리닉 지원사례

1. 특허기술이 갖는 중요성	128
2. 불량 원인 제거를 통한 생산성 향상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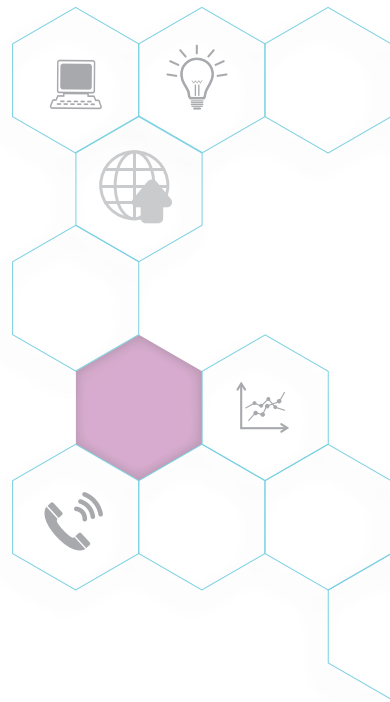




Ⅲ. 중소기업청 및 지원기관 연락처

1. 중소기업청	134
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135
3. 지방중소기업청	135
4.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138
5. 중소기업진흥공단	138
6. 중소기업중앙회	140
7. 지역신용보증재단	141
8. 중소기업 지원기관	142

Ⅳ. 집필진 소개 146



www.bizinfo.go.kr





Chapter I

기술·특허

1. 기술기획
2. 기술개발
3. 기술인증
4. 기술사업화
5. 특허
6. 상표
7. 디자인
8. 저작권 기타

기술·특허분야 일러두기

(가이드북 읽는 법)

1

기술특허분야 가이드북의 주요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지원제도 및 국내특허관계법령, 국제조약, 법원판례,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청심사기준 및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의 유권해석 등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주요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촉진법, 벤처기업특별법, 창업지원법,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이며 내용은 법전이나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http://glaw.scourt.go.kr>) 법령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판례는 지방법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의 판결 결과이며 「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0후2605판결」라고 표시되며 종합법률서비스(<http://glaw.scourt.go.kr>)에서 인터넷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안내 사이트인 비즈인포(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심결은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진 심결로서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5

특허청심사기준 및 특허청 유권해석에 대부분의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6

지면관계상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인터넷 주소 등만을 게재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Biz
info**

천번의 두드림, 기업 성공 안내서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1. 기술기획

Q1	기술경영(MOT)	16
Q2	기술타당성 평가요소	17
Q3	가치공학	18
Q4	제조물책임법	20
Q5	기술경제성 분석	22

2. 기술개발

Q6	제품설계	23
Q7	기술개발 절차	24
Q8	선행연구조사	26
Q9	역설계	27
Q10	외부연구원의 인건비기준	28
Q11	연구노트	29
Q12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30
Q13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	31
Q1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인력기준	33
Q15	R&D사업의 정부출연금과 현물의 의미	35
Q16	연구장비공동이용	36

3. 기술인증

Q17	기술정보보호	37
Q18	기술개발 후 제품성능인증	38
Q19	신기술(NET) 인증	39
Q20	신제품(NEP) 인증	42
Q21	신제품 인증과 신기술 인증의 차이점	44
Q22	벤처기업인증	45
Q23	이노비즈인증	46



Q24	이노비즈 기업의 혜택	47
Q25	이노비즈와 벤처의 차이점	48
Q26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차이점	49
Q27	기술자료 임치제도	50

4. 기술사업화

Q28	개발기술사업화자금	52
Q29	특허기술사업화자금	53
Q30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54
Q31	기술담보제도	55
Q32	투자 연계형 부품소재 기술개발	56
Q33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57
Q34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58
Q35	기술거래 지원제도	59

5. 특허

Q36	특허의 정의	60
Q37	특허권 취득의 필요성	61
Q38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62
Q39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64
Q40	특허출원 시 대리인 선임여부	66
Q41	물질조성물 특허 출원 시 필요한 기술내용 및 데이터의 객관성 정도	67
Q42	특허심사기간단축 및 연장제도	68
Q43	신규미생물의 보호방법	70
Q44	외국 제품을 국내에서 특허출원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71
Q45	특허출원을 위한 논문발표와 특허출원의 선후	72
Q46	제품출시 또는 논문발표와 특허출원의 선후	73
Q47	특허청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대응방법	74
Q48	특허출원 후 제품출시 전 필수 고려사항	75

Q49	국내출원을 근거로 하여 외국특허권을 취득하는 방법	76
Q50	특허권 침해 요건, 침해 유형 및 침해 시 구제수단	78
Q5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80
Q52	실시권 설정	82
Q53	특허권 침해경고에 대한 대응방법	83
Q54	특허권이 압류대상인지 여부	84
Q55	특허권 압류로 인한 특허권자의 권리제한범위	85
Q56	특허의 이용관계 성립 시 적법한 실시를 위한 조치	86
Q57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한 자유기술의 항변	87
Q58	외국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88
Q59	수출제품의 특허권 침해여부	89
Q60	개발아이템에 대한 기술자문 컨설팅	90
Q61	특허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92
Q62	특허성조사와 특허동향조사의 차이점	95
Q63	신기술인증과 특허의 차이점	96

6. 상표

Q64	10년 동안 사용한 상표를 타인이 상표 출원한 경우 대처 방법	97
Q65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방법	98
Q66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절차	99
Q67	상표권자의 정당한 사용	100
Q68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표의 등록 여부	101
Q69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대한 제재 방법	102
Q70	중국에서 등록된 영문상표를 중문으로 표기하여 출원된 중국 상표에 대한 제재 방법	103
Q71	상표출원의 대상	104
Q72	상표의 우선심사	105



7. 디자인

Q73	디자인 출원 시 실제제품의 존재 여부 및 제품판매 후 디자인 출원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106
Q74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가처분결정 후 권리자의 법적 조치	107
Q75	공유디자인권의 공유자의 실시범위	108
Q76	디자인 침해판단 범위	109
Q77	디자인 침해 시 법적 조치	110
Q78	폰트 다운로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11
Q79	도용된 디자인이 디자인 출원된 경우 구제 방법	112

8. 저작권 기타

Q80	책 속에 다른 책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113
Q81	회사 홈페이지에 회사를 취재한 기사 또는 사진을 업로드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114
Q82	도형캐릭터의 보호 방법	115
Q83	번역 위탁 작업 시 번역자의 법적 지위	116
Q84	합법적인 저작물이용 방법	117
Q85	저작권등록의 효력	119
Q86	소프트웨어의 보호 방법	120
Q87	업로드 한 불법복제물로 인한 문제	121
Q88	지적재산권매매	122
Q89	전자우편을 통한 판촉 시 사용된 저작물이 저작권 권리행사 제한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23
Q90	공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제공업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가능한지 여부	124



1 기술기획



1 기술경영(MOT)

최근 기술경영(MO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기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이란 어떤 제품을 만들어 어떻게 시장에 내놓을 것인지, 그와 관련된 기술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기업 경영상의 의사결정 과정을 말합니다. 기업이 기술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만 그 대부분은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기술개발에 힘을 기울이되, 어떤 기술개발에 역점을 둘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MOT는 과학 및 공학 기술과 경영 원리를 구분하여 관리하던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과 경영 능력을 연결하여 엔지니어링, 경영학, 과학 등에서 도출된 지식을 결합하여 MOT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MOT를 통하여 기술 자체와 개발을 관리하고 다양한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타당성 평가요소

2

기술개발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타당성 평가요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기술적 타당성 평가는 기술개발 전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사업 전 사업타당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과 같으며 이를 통하여 성공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바 주로 계획 제품의 용도, 품질 및 경쟁성 분석, 입지 조건 분석, 계획 시설의 적정성 및 장래성 분석, 생산 및 재고 분석을 진행합니다.

A

※ 기술타당성 평가 예

평가요소	세부평가항목
계획 제품의 용도, 품질 및 경쟁성 분석	제품의 주요 용도 및 소비처
	제품의 기능, 물리, 화학적 특징
	품질 및 기술의 수준
	제품 및 기술의 경쟁성
	국내외 경쟁업체 현황
입지 조건 분석	기술의 장래성
	일반적 입지 인자 분석
	제조업의 주요 입지 인자 분석
계획 시설의 적정성 및 장래성 분석	관계 법규상의 제약 요인 분석
	계획 시설의 적정성 및 장래성 분석
	주요 계획 시설 및 계획 시설의 적정성
	토지, 건물, 기계 등의 시설 계획 명세
	시설 상호 간의 효율성 및 균형 여부
	계획 시설의 적정 여부
	생산 설비의 선정
	시설 배치의 합리성
	시설 공사 진행 계획 분석
	공사 진행 계획의 타당성
	계획 시설의 장래성
생산 및 재고 분석	생산 방식과 생산 공정의 효율성
	생산 능력 및 가동률 산정
	원재료, 동력, 용수 등의 능력
	소요 인원 및 기술 능력
	생산 조직 및 인력의 효율성
	소요 원재료 공급의 원활성
	재고 분석



1. 기술기획



3 가치공학

가치공학이 무엇이며 실행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인가요?

A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은 원가절감과 제품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제품개발에서부터 설계, 생산, 유통, 서비스 등 모든 경영활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영기법으로 가치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가치공학은 또 다양한 목표를 수용, 그 목표를 가장 값싸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길을 찾는 기법이며 가치공학이 다른 혁신기법과 다른 점은 전사적 품질경영(TQM)이 문화적 차원에서 종업원들의 태도 변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가치공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또 산업공학이 순수한 엔지니어링이라면 가치공학은 일종의 분석 프로세스로 리엔지니어링에 가치공학을 도입하면 효과를 배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신제품의 설계에도 이러한 기능적 연구법을 적용하며 제조공정은 자동화가 될수록 제조과정 자체에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가치공학은 제조과정 밖으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생겨난 비용절감의 새 관리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치공학의 적용 및 활용 예

구분	단계	효 과
적용 방법 및 효과	설계	설계 단계에서 VE 적용 시 직접적인 수혜 대상자는 발주처이며, 대상 시설물의 체적이나 규모를 축소시켜 전체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발주	발주방식 선택에 따라 공사비가 큰 차이가 나며, 시설물과 사업 환경에 따른 적절한 발주 방식의 선택은 발주자와 계약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게 됩니다.
	시공	유지단계에서 VE를 적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나,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계 및 전기 설비의 효율성 검토와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유지 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설비를 선정할 때 유지 및 보수 단계에서 VE 효과가 나타납니다.
적용 수단 / 적용 도구	① 엔지니어링 : 설계, 제품개선 ② 제조 : 물자 취급, 도구 설계 및 제작 ③ 구매 : 제조자의 공급자 대안 제안, 새로운 제품 정보 ④ 판매 : 판매가 저조한 제품 ⑤ 시스템 및 절차 : 문서작업, 양식 처리, 재생산 서비스 ⑥ 유지 : 절차, 재료, 작업 스케줄링 ⑦ 에너지 전환 : 절차, 수명주기, 비용분석 ⑧ 건설 : 기획, 스케줄링, 노동, 소비재 초과 사용	



1. 기술기획



4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은 제조된 물건의 결함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자로 하여금 그 피해를 보상하게 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는 제조자로 하여금 위험을 예측하여 해결책을 세워 제품제조 시 반영하여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조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하여 소비자가 오용을 하더라도 피해를 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과거의 경우 피해자가 결함 사실을 입증해야 했고 이 점이 어려워 대부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법의 특별법인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제조자가 결함의 유무를 입증해야함으로써 소비자는 보다 손쉽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조자는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이 없도록 제품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제조물책임법의 결함과 면책사유 설명

결함	<p>제조물책임법에서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p> <p>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을 말하며</p> <p>“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p> <p>“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며</p> <p>“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p>
면책사유	<p>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조물 책임법 참고



1. 기술기획



5 기술경제성 분석

기술경제성 분석이 무엇이며 추진 시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과학기술 시장경제의 구조변화 속에서 경제성이 배제된 기술개발과 상품생산은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주체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나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과정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서 성공한 기술은 시장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상용화를 통해 경제적 잉여창출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가 반드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경제주체는 연구개발 투자에 앞서 기술경제성을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술경제성 분석이란 연구개발을 수반하는 신기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사업의 시행에 앞서 직·간접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투입-산출], [비용-편익]을 시장개념에 입각하여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어떤 사업의 수행여부 또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기술경제성 분석은 경제적 가치 외에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술개발

제품설계

6



기술개발과정 중에 있으며 제품을 설계하려 합니다. 통상의 제품설계 절차가 있나요?

A

제품설계는 제품기획에서 설정된 사양을 기초로 목표로 하는 성능이나 기능을 구현하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제품설계는 크게 나누어

- ① 개념·구상설계
- ② 기본설계(기능설계)
- ③ 상세설계
- ④ 생산설계(양산설계)

의 단계의 4개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품설계란 ①~④까지의 모든 단계를 가리키며 기계의 구조, 기구, 형상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마무리해나가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각 단계에서의 부적격으로 인한 설계 수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이 실시되어 효과를 보고 있으며 컨커런트 엔지니어링(Concurrent Engineering)이란 동시병행설계의 의미로 개념설계, 제품설계, 부품조달, 제조판매, 수송 등 제품개발의 전 사이클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동시에 설계함으로써 제품의 출하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는 경영혁신 기법입니다.

※ 제품설계 절차 예

구분	단계 및 전략
아이디어	아이디어 창출 → 제품선정 → 제품설계
제품설계	1차 제품설계 → 시험용 모형 → 시장시험 → 최종제품
최종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설계(기능·성능의 구체화) - 형태설계(제품 외관에 대한 설계) - 생산설계(기능과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적·효율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
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시장지향적 전략) - 태스크포스조직(다기능 간 협력전략) - 연구개발(기술지향적 전략)



2. 기술개발



7 기술개발 절차

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기술개발 절차 및 제품기획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A 기술개발은 초기 개발전략계획 수립단계부터 시작하여 제품의 양산시기까지를 다루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초기 개발전략계획 수립단계입니다.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시기에 이미 해당 목표 기술 분야의 객관적 타당성, 성공 가능성, 수익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 모든 사항이 이미 객관화 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후의 작업은 계획 수립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목표를 향하여 추진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개발전략계획 단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관점에서 최고 경영자, 지원조직 등의 간접 참여 조직이지만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조직을 관리하고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구 조직과 관련지을 수 있는가에 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 개발 추진절차 및 제품기획과 컨셉 예

구분	추진 단계 및 내용
기술개발 추진절차	① 사업 아이디어 탐구 단계 ② 연구 개발의 실현 단계 ③ 시작품 제작 단계 ④ 생산 단계 ⑤ 마케팅 단계 ⑥ 기술적 타당성 평가 요소 ⑦ 기술 사할 결정 요소
제품기획	① 시장 : 기획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속해 있는 시장 및 규모 ② 고객 : 대상 고객의 분석 ③ 기능 : 제품의 주요 기능 ④ 비용 : 개발비용과 제반 경비 ⑤ 가격 : 가격 정책 ⑥ 로드맵 : 제품 및 기술 로드맵
제품컨셉	① 독창성 : 성능, 포장, 디자인 브랜드 등 ② 참신성 : 상품아이디어, 포장, 디자인, 광고 등 ③ 매력성 : 브랜드, 디자인, 색상, 광고 등 호감도 ④ 차별성 : 성능, 품질, 디자인, A/S, 광고 등 ⑤ 가격 경쟁력 : 가격 적정성, 사용편리성, 내구성 등 품질비 가격 ⑥ 적시성 : 상품 출시의 적절한 타이밍 ⑦ 가치 창조성 : 부가적 가치, 사용가치, 사용자 취향 적합성 ⑧ 신뢰성 : 성능, 품질, 이미지



2. 기술개발



8 선행연구조사

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전에 관련 연구 및 기술이 있는지 조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A 선행연구조사라 함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수행 전에 연구기획 단계에서 연구동향 조사 등을 이유로 선행문헌을 조사하거나, 선행기술개발과제 또는 연구개발 완료 단계에서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유효한 권리 범위 획득 등을 이유로 선행문헌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행연구조사 대상은 논문 등의 학술 정보 및 국가연구과제, 특허정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조사라 함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기 수행하였던 연구과제 및 특허정보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특허정보가 다른 문헌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최신 기술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조사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선행연구기술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조사대상기술의 관련업체를 통해 조사하는 방법, 특허법률사무소 또는 선행기술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해 직접 조사하는 방법, 도서관 등 과학문헌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조사하는 방법, 관련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출판사를 통해 조사하는 방법, 외국특허청 또는 외국현지대리인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하면 변리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선행연구기술조사 사이트

국내 검색 사이트

(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www.ntis.go.kr

(2) 한국특허정보원 : www.kisti.re.kr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www.kisti.re.kr

외국 검색 사이트

(1) 일본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 www.ipdl.jpo.go.jp

(2) 유럽특허청 특허검색 : www.uspto.gov/patft

(3) 미국특허청 특허검색 : www.uspto.gov/patft

전문가 활용 및 지원기관

(1) 지역지식재산센터 : rpc.org



역설계

9

당사는 아직 설계기술이 미흡하여 기존제품의 설계기술을 학습하여 기술개발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역설계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설계하는 것인가요?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란, 주어진 실제 물체로부터 공학적 개념이나 형상 모델을 추출해내는 과정으로 과거에는 설계개념을 통해 제품을 개발, 제품화의 과정을 수행하였지만, 역설계는 이 과정의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A

즉, 역설계는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으로 추적하여 애초의 문서나 설계 기법 등의 자료를 얻어 내는 것으로 자동차, 항공, 의료장비 등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 CAD 분야 등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 역설계의 활용 예

- ① 유사하거나 향상된 제품 / 디자인을 개발
- ② 원래 제품의 케이스 및 장비의 패키징화
- ③ 기존의 제품을 대량생산화
- ④ 디지털복원 및 치수 측정
- ⑤ 변형에 대한 부분을 분석
- ⑥ 설계도면을 보유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변형 및 디자인을 새롭게 변형
- ⑦ 치수에 대한 왜곡된 부분을 알고자 할 때



2. 기술개발



10 외부연구원의 인건비기준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소속되지 않은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를 어떤 기준에 맞추어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연구원의 인건비는 통상 주관기관(기업)의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인건비는 기업의 급여기준에 맞추어 작성하시고 외부인건비는 해당소속기관의 인건비를 적용하며 소속되지 아니한 연구원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 관련법령에 의한 외부연구원 인건비 기준(2011년도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 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중복 지급 불가)
학생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 이상 : 3,000천 원×참여기간×참여율 박사 과정 : 2,500천 원×참여기간×참여율 석사 과정 : 1,800천 원×참여기간×참여율 학사 이하 : 1,000천 원×참여기간×참여율
프리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외부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연구노트

11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지침'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떠한 것이며 반드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훈령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적을 기록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연구노트작성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연구노트의 개념
-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 ③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 ④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련규정 : 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참고)



2. 기술개발



12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는 누가 되나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제품, 연구노트 등) 및 무형적 결과물(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과 참여기업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무형적 결과물을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기관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참고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

1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과제완료 후 성공 판정을 받게 되면 국가에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왜 납부해야하며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요?

A 기술료는 원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실시권(license)의 대가로서 실시권자(licensee)가 실시권 허여자(licensor)에게 지급해야 할 실시료 내지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로열티(royalty)로 불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사용, 양도, 대여 및 수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으로써 징수한 기술료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전액, 영리법인인 경우는 전문기관 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 1) 참여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 2)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적재산권 출원 경비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즉,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발생된 연구개발 결과물 중 정부투자 지분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하고, 징수된 기술료를 연구 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연구개발 선순환구조를 창출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2. 기술개발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사용용도

구분	용도
기술개발 사업 재투자	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으로서 당해연 도 연구개발비 투자가 필요한 사업 나. 예산편성 후에 생긴 환율·물가변동 또는 설계의 변경 등으로 인하 여 기정예산의 추가조정이 필요한 사업 다.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 사업투자	가. 기술개발사업의 사전기획 또는 사후평가 사업 나. 기술개발 완료과제의 제품화 촉진을 위한 사업 다. 지식재산권 등 기술이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 라.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한 우수 연구원 또는 기술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성과를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마. 기술개발에 참여한 기관의 운영 경비 바.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공공기금에 출연	가. 중소기업청장이 관리·운영하는 연구개발 관련 공공기금에 산입 나.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금에의 출연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인력기준

14

중소기업으로 연구활성화 및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려 합니다. 연구소 설립 요건 중 연구인력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연구전담요원 기준〉

A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 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소 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 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1명 이상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임



2. 기술개발



※ 연구전담요원 대상자(2013년도 기준)

- 당해 연구분야 관련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와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연구소/전담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을 포함)이 있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도 인정함
(안 제2조제3항제5호 신설)

[연구분야에 따른 특칙]

- 정보처리분야 : 기업의 주업종이 중소기업기준표 상의 기준경비율코드가 '72'로 시작되어야 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산업디자인분야 :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 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관련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R&D사업의 정부출연금과 현물의 의미

15

정부R&D과제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R&D과제 공고문을 보니 지원금액에서 정부출연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것인지와 현물의 의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정부출연금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합니다.

즉, 대출금이나 정책자금처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 R&D 사업은 최종 평가 시 성공한 과제의 경우 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보통 10~40% 정도를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불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여 최종 평가 시 과제 실패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및 국가정부 R&D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물의 의미는 현금과 대별되며 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할 수는 없으나 현금에 대체가능한 연구원 인건비, 연구장비 등을 말합니다.



2. 기술개발



16 연구장비공동이용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연구장비가 매우 고가
이어서 개발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
나요?

A 연구장비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
업 공동 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
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1천만 원 이상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이며, 참여 중소기업은 사업 승인 후 연
구개발에 필요한 주관기관의 연구장비 이용 시 장비 이용수수료를 최대
60~70% 범위 내 5천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참여기업은 온라인 쿠폰인 바우처를 구매하여 장비를 이용하여야 하며, 최
대 5천만 원까지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초에 중소기업
청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sanhak.smba.go.kr)에 지원내용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중소기업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sanhak.smba.go.kr

3 기술인증

기술정보보호

17

당사는 비교적 많은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기술 유출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허술한 보안체제로 인한 첨단 기술의 유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기술유출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대응 등을 위해 보안(기술), 법률 등 분야별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기술보호 정책지원사업, 기술보호(사전), 유출(사후) ON-OFF LINE 전문상담제공, 기술유출방지사업 및 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국가 R&D 참여중소기업 등입니다.

〈관련 사이트〉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 : www.tpcc.or.kr



3. 기술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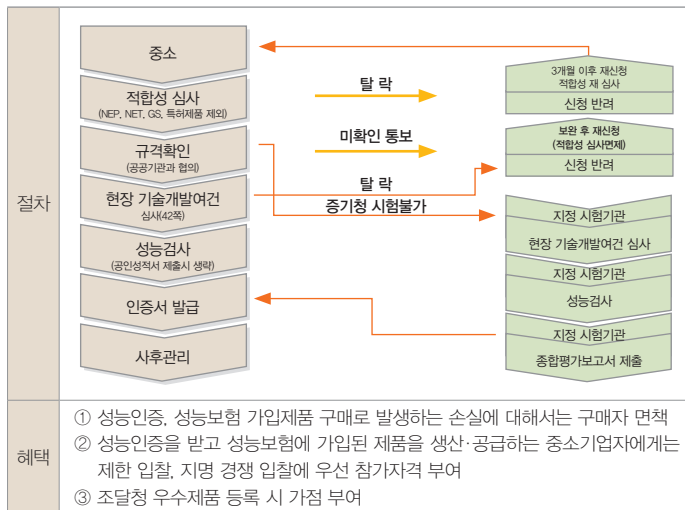
18 기술개발 후 제품성능인증

기술개발 완료 후 조달과 관련하여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인증절차 및 혜택에 대하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A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그 제품에 대한 성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성능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꾀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능인증에 대한 추진절차 및 혜택은 아래와 같으며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6조 1항 6호에 의거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도 납품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지명·제한경쟁 입찰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성능인증 절차 및 혜택





신기술(NET) 인증

19

기술개발을 통하여 제품을 개발하였는바 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와 지원혜택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신기술(NET) 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창출함으로써 초기 시장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또는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이 대상이 됩니다.



3. 기술인증



※ 심사절차

구분	위원회	심사 방법	심사범위	비고
1차 심사	전문분과 위원회 (5~8명)	서류 면접 심사	①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 기술의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의 경영성 및 상용화개발자금 지원필요성 등에 대하여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심사 ② 상위심사 상정과제 선정과 기술명 조정 및 인증 기간 부여	① 심사장소/시간지정 통보 ② 기업 기술 설명자 참석면접
2차 심사	전문분과 위원회 (3~6명)	현장 심사	① 1차심사결과 신청기술 적용제품 제조사업장 및 공장(하청공장 포함) 또는 시험 운전장소 등에서 확인하고 시제품의 성능, 품질경영 체계 등을 심사 * 1차 심사결과 선정된 모든 기술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② 3차 심사 상정과제 선정 ③ 상정기술의 기술명 조정 및 인증기간 부여	1차 심사결과에 따라 2차 심사 대상기업에 개별통보
3차 심사	종합심사 위원회 (30명 내외)	종합 회의 심사	기술분야별 3개 위원회로 구성 운영 1. 제1종합심사위원회 ① 전기·전자분야, 정보통신 분야 2. 제2종합심사위원회 ① 기계·소재분야, 원자력 분야 3. 제3종합심사위원회 - 화학·생명분야, 건설·환경 분야 ① 1, 2차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확인 및 인증기술 선정(선정·보류·탈락) ② 선정기술에 대한 인증기간 확정·부여 ③ 이의신청, 기간연장, 인증취소 심사	① 산·학·연·관 전문가의 종합회의 심사 ② 기업기술 설명자 참석면접



※ 지원혜택

1. 자금지원
 - ①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한 신기술 후속연구개발비 용자
2.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 및 추천
 - ① 공공기관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구매 추천
 - ②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적격심사 등 가산점
 - ③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제도
3. 조세지원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의거 신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4. 홍보지원
 - ① KT마크 홈페이지(<http://www.netmark.or.kr>) 운영
 - ② 언론매체를 통한 신기술 홍보 및 초록집 발간 배포
5. 신기술기업협의회(NET Club) 운영
 - ① 기술분야별 소그룹 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 ②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6. 연구개발사업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가점 부여

〈관련법령 및 사이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60호)
사이트 : www.netmark.or.kr



3. 기술인증



20 신제품(NEP) 인증

신제품 인증신청을 위한 검토단계로 신제품인증을 통하여 조달 우수제품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신제품인증 신청대상과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신제품 인증신청 대상은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신제품(NEP)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기술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신제품 인증의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기술표준원 민원실(정보통신제품은 전파연구소)에서 하며 신청 수수료는 무료로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 인증 유효기간은 3년,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 가능합니다.

※ NEP 인증 기준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탁월하게 우수할 것
3. 동일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4. 타인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재신청은 NEP 인증 심의 시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용화

“실용화”라 함은 안정된 품질의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제품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것을 말함(곧, 판매한 후 실제 사용하고 있어야 함).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함.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관련법령 및 사이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 요령
사이트 : www.kats.go.kr/nep/



3. 기술인증



21 신제품 인증과 신기술 인증의 차이점

당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제품개발을 완료하였고 시제품 제작 및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달 우수제품 등록을 위하여 신제품 또는 신기술 인증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각 인증이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실용화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에 한하여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은 기존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거나,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 기술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내주는 제도로 두 가지 인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실적이 있느냐 없느냐이며, 판매 실적이 있으면 신제품(NEP) 인증을, 판매실적이 없으면 신기술(NET)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요약하면 NEP란 신기술을 이용하여 실용화에 성공한 제품을, NET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및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실용화 시에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라고 정의됩니다.

이 제도의 담당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장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NEP가 3년(최대 6년)이고 NET가 3년(최대 9년)입니다.

※ NET와 NEP 인증개요 및 비교

구분	신기술(NET) 인증	신제품(NEP) 인증
명칭	New Excellent Technology	New Excellent Product
인증대상	신기술 :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및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실용화 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신제품 : 신기술을 이용하여 실용화에 성공한 제품
인증주체	산자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토교통부(건교평) 환경부(환경관리공단)	산자부(기술표준원) 정통부(전파연구소)
유효기간	3년 이내(2회 연장신청 가능)	3년(최대3년 연장신청 가능)
지원방안	인증기술의 실용화 지원 등	인증제품의 판로확보 지원 등



벤처기업인증

22

벤처기업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벤처인증의 요건에 대하여 안내 바랍니다.

벤처기업이라하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리스크가 많은 기업을 창업하여 신시장에 도전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의 개념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 개발기업, 기술평가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A

〈벤처확인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유형1 벤처 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 공단
유형3 기술평가 보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 대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중진공의 대출 또는 기보의 보증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중소기업진흥 공단
유형5 예비 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 공단

주)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의 벤처확인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및 사이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이트 : <http://www.venturein.or.kr/>



3. 기술인증



23 이노비즈인증

창업 3년 이상 경과된 기업입니다. 이노비즈 인증절차와 평가기준 및 지원혜택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NNOBIZ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하며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이노비즈기업(Inno-Biz)으로 선정하여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인증절차와 평가기준 및 지원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증절차 및 평가기준

인증절차	<div>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div> <div>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 / 평가지표 자가진단체크</div> <div>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div> <div>온라인 자가진단(650점 이상 통과)</div> <div>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700점 이상 통과)</div> <div>등급별 업체 선정(900점 이상:AAA, 900점~800점:AA, 800점~700점:A)</div> <div>이노비즈기업 인증서 발급</div>
평가기준	①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②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개별기술수준평가 B등급 이상

<관련 사이트>

www.innobiz.net



이노비즈 기업의 혜택

24

이노비즈인증을 받았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취득 시 어떤 지원혜택이 있나요?

A 이노비즈인증 시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부지원 R&D지원 시 우대가점, 금융지원으로 보증한도 상향 및 보증료 감면, 병역지정업체 추천 우대 등 인력지원, 판로지원,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지원 혜택

구분	지원내용
금융	기술혁신개발, 이전기술개발, 구매조건부기술개발, 기업협동형공동기술개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가점 2점) -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산학협력실,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 생산정보화(가점 3점) - 불법기술유통 방지사업(가점 2점) - 중소기업기술경영컨설팅(5점) - 해외유명인증규격 획득지원(5점)
금융지원	- 부분보증비율 전액보증 - 기업당 보증한도 상향 - 보증료감면
인력지원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추천 우대
판로지원 (수출포함)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신인도 평가부문) 우대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 우대 - 민간해외자원센터 활용사업 참여 시 지원비율을 일반기업 대비 10% 상향 - 글로벌브랜드사업 참여자격 완화 적용 : 수출 200만 불 이상(일반기업: 500만 불 이상) -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 시 우대
기타지원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
정책자금 지원우대	-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 혁신형 기업에 대한 우대는 잔액기준(50~60억원)과 매출액(150% 이내) 한도 예외 적용을 허용 - 신성장기반 자금 지원 시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를 40%까지 지원(일반기업 30% 이내) - 신성장기반 자금 지원 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이 가능(일반기업은 시설자금과 연계)

〈관련 사이트〉

www.innobiz.net



3. 기술인증



25 이노비즈와 벤처의 차이점

이노비즈인증을 획득할 예정인데 특허나 지원면에서 이노비즈와 벤처 인증의 차이점이 있는지와 두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 혜택이 더 큰지요.

A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인증에는 금융, 인력, 기술, 입지, M&A, 세제 등의 지원이 있으며 또한, 기관(타기업, 금융기관 등)과의 접촉 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1. 벤처인증의 효과는

- (1) 연구벤처기업 인가 필수요소
- (2) 이노비즈기업인증 평가 시 우세
- (3) 설립 5년 미만 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
- (4) 국가 R&D사업 신청 가점
- (5) 병역특례 추천 심사시 가점
- (6) TV, 신문 광고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2. 이노비즈인증의 효과에 대해서는

- (1) 정책자금 지원 시 금리 및 보증 우대
- (2) 대외적인 기업 신인도제도
- (3) 벤처기업의 요건이 되지 않는 기술기반기업의 지원
- (4) 광고비 할인, 국가연구개발자금지원, 병역특례 추천 심사 시 가점 등이 있습니다.

만약 업력이 3년 미만의 기업은 벤처기업만 가능하며 업력이 3년 이상의 기업은 이노비즈인증이 가능합니다.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설립 후 바로 벤처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회사의 보증한도 및 대출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이노비즈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가지를 동시에 갖출 경우 일부 지원혜택은 중복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효과가 두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차이점

26

회사인증 관련하여 메인비즈와 이노비즈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신용평가의 신인도 점수 향상을 위하여 이노비즈(기술혁신형중소기업) 또는 메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인증을 많이 받는 추세입니다.

A

1. 혁신형기업의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벤처기업 : 설립 후 기술력, 신뢰도가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
- (2) 이노비즈기업 : 설립 3년 이상의 업체 중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
- (3) 메인비즈(경영혁신형기업) : 설립 3년 이상의 업체의 경영능력을 인증하는 제도

2. 이노비즈와 메인비즈의 차이점은

- (1) 이노비즈 : 주로 제조, IT 등 기술력(특허, 실용, 프로그램등록, 신기술, 신제품)을 보유한 업체들 위주의 인증제도
- (2) 메인비즈 : 주로 서비스, 컨설팅, 건설, 프랜차이즈 등 기술보다는 경영능력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을 인증하기 위한 제도

3. 이노비즈와 메인비즈의 이점

- (1) 회사의 자금 조달 시 금리우대
- (2) 조달 입찰점수 우대
- (3) 신용평가 우대
- (4) 기타 중소기업 정책 지원 시 우선순위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3. 기술인증



27 기술자료 임치제도

최근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보호를 받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특허와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A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기술자료임치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 임치제도 이용효과 및 대상물

구분	내용
이용 효과	① 기술탈취방지 : 수·위탁거래 시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대기업에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개발자 보호) ② 개발사실 입증 : 개발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여부 입증(개발자 보호) ③ 기술멸실 방지 : 내부 직원의 악의적 삭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데이터 손실 시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기술의 사장화 방지(개발자 보호) ④ 기술유출 예방 : 핵심 기술을 정부가 안전하게 보호함에 따라 관계자는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 발생(개발자 보호) ⑤ 사용권 보장 : 사용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폐업, 유지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보수 보장(사용자 보호) ⑥ R&D 안정성 확보 : 정부 및 대기업 등이 투자한 기술개발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신뢰성 보장(정부 및 사용자 보호) 등
임치 대상물	① 기술상 정보 : 시설 및 제품 설계도 / 물품의 생산제조 방법 / SW 등 ②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기밀서류 / 매출과 관련한 기밀서류 등



※ 특허와의 차이점

구분	특허제도	임치제도
권리발생	설정등록 방식으로 특허청 심사를 거친 후 효력 발생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순간 기술에 대한 추정 효과 발생
정보공개	특허등록정보는 누구든지 열람·복제 가능	임치물에 대한 기술정보는 개발기업을 제외하고 열람 불가
보호대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기술	산업재산권 및 물품 등의 제조방법,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보호기간	특허등록 후 20년	기술이 유출되지 않으면 영구적 기술 보호 가능

〈관련 사이트〉

대중소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 <http://www.kescrow.or.kr>



4

기술사업화

28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개발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자금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을 위한 기본 준비는 아래 표의 대상조건 및 국제, 지방세 완납, 개발기술의 상용화 성공에 대한 자료준비,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각종 가점 확보(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지적재산권, ISO 등)가 필요합니다.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에 대한 세부 내용

구분	내용
신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 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산업, 프랜차이즈업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용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용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6%p 차감(기준금리)
대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단, 중진공 신용대출 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 한도	대출한도업체당 연간 20억 원(운전자금은 5억 원)

〈관련 사이트〉

중소기업진흥공단 : www.sbc.or.kr



특허기술사업화자금

29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면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중에는 특허 등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있습니다. 동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예비평가와 본 평가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순수 신용이나 보증서부(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담보부로 직접대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이 있으며, 이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대출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대리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중소기업진흥공단 : www.sbc.or.kr



4. 기술사업화



30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자체개발한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받았습니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A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 성능인증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의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인증), NEP(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인증), GS(Good Software, 우수SW), 조달청의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 받은 경우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기술개발제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3천여 개가 있으며 기술개발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별공공기관에 구매요청을 하거나 기업의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우선구매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중소기업진흥공단 : www.sbc.or.kr



기술담보제도

31

특허출원을 준비 중으로 특허등록 후 이를 기술담보로 활용할 수 있나요?

A 기술담보제도는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 저작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설정하고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금융대출을 실시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연구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을 기술집약형 구조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술담보제도는 장기적으로 기술평가 인력의 양성 및 기술평가 기법 개발을 통한 기술가치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기술의 매매, 투자 등 기술거래 시장의 발전, 활성화 및 기술확산을 도모하여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급선무이며,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령·동법 시행령 및 기술담보 시범사업 운용 요령 등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 저작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령



4. 기술사업화



32 투자 연계형 부품소재 기술개발

투자 연계형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들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A 투자연계형 R&D사업은 기술성이 인정된 R&D 과제에 대해 은행, 창투자 등 투자기관들이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한 경우, 정부가 R&D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연계형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된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은 사업화 기술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최대 3년간 연 7~8억 원의 정부출연금과 평균 17.6억 원의 민간 투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정부출연금은 기존의 R&D 사업과는 달리,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및 해외인증 획득 등에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부품소재기업들이 정부의 R&D 지원과 함께 대규모로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의 조달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련법령〉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령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33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A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담보와 이자 없이 지원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지원 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과제형태가 있습니다.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분류

분류	내용
수요조사과제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일반과제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또는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조합, 각종단체, 병원 등)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전략과제	국방·기상·소방 등 공공분야의 외국산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계획에 따른 전략과제 또는 하나의 완제품 생산을 위해 다수의 부품개발이 필요한 과제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모집방법은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국내 기술수요처를 대상으로 과제를 수시로 모집하며, 신기술·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제안된 과제는 기술성, 경제성 등 과제검증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과제로 공고, 자금소진 시까지 운영합니다.



4. 기술사업화



34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자격은 무엇이며 어디에 신청해야 되나요?

A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는 조달청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신기술 및 우수품질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 후 수익계약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함으로써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제도의 지정대상 인증 및 지정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및 분야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인증 + 품질인증 제품 ① 기술인증 : NEP, 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② 품질인증 : 성능인증, GQ, GR, 환경표지인증, GS인증, K마크, 고효율기자재인증 ※ 대기업은 신청 불가
지정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전자/정보통신/건설환경/화학섬유/기계장치 - 사무기기/과학기기/의료장비
신청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우수제품과 - 각 지방조달청 - 조달청 품질관리단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기술거래 지원제도

35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발된 기술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기술평가지원, 기술사업화지원, 기술거래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거래관련 사이트는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가 있으며 사이버상에서 특허기술의 거래, 이전을 지원(이전 대상 특허기술 정보제공, 기술거래 및 사업화 등 관련정보 제공, 이용자 간 자율적인 특허기술거래 참여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www.patentmart.or.kr(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이며 특허기술상설장터를 개설하여 오프라인상에서 특허기술의 거래, 이전을 지원(거래기술전시, 기술이전 표준계약모델 제공, 전문유통상담관 배치) 하며, 특허기술 상설장터 테마별 기획전시(현재의 기술분야별 전시에서 제품(휴대폰, MP3 등) 중심의 전시를 병행 실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테크노파크 기술이전센터나 민간 기술거래기관을 활용하여 기술이전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사이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사이트 : www.patentmart.or.kr



5 특허



36 특허의 정의

저희 A사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품을 개발하여 사업하려고 하면 특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허란 무엇인가요?

A 특허란 용어는 크게 특허 출원된 발명, 특허발명 또는 특허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허 출원된 발명”이란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된 발명을 말하고, “특허발명”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하며, “특허권”이란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주는 독점권을 의미합니다.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 국가에 대해 자신의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 문서(명세서)를 제출 즉 출원하면, 국가(특허청)가 그 출원된 발명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심사)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통해 특허권을 발생시켜 출원한 날부터 20년간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출원인에게 인정하는 특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특허법 제2조(정의)



특허권 취득의 필요성

37

사업을 하는데 있어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크게 하기와 같은 3가지 전략적 특성 때문입니다.

1. 안출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받고 독점력을 갖도록 하여 타인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타인의 권리행사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개발된 기술을 간과하여 귀사가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제3자가 귀사의 기술과 유사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하여 귀사의 제품 생산 및 판매행위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3. 소비자 및 동종업자에게 귀사의 보유 특허건수를 들어 귀사의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고, 홍보 및 광고에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5. 특허



38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저희 B사는 기존에 알려진 난로보다 열효율이 매우 우수한 기계적 구조를 가진 난로를 개발하였는데, 주변에서 특허로 출원해야 한다고도 하고 실용신안으로 출원해야 한다고도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떻게 다른지, 개발된 기술을 보호받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고도성 유무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여부에 있습니다.

그 결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점에서는 발명과 고안이 같지만 발명은 고도해야 하고 고안은 고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보호대상의 범위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건뿐만 아니라 방법 및 물질까지 포함되지만,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이 되는 고안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건만이 보호대상입니다. 그 결과 특허는 물건뿐만 아니라 물질의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만을 그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3. 존속기간의 상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그것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단기간인데, 고안이 발명보다 일반적으로 모방이 용이하여 제품 수명(product life cycle)이 짧기 때문입니다.



4. 기타 차이점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며,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는 그 우선일로부터) 5년인데 비하여 실용신안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인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귀사의 개발기술인 새로운 구조의 난로는 실용신안뿐만 아니라 특허의 보호대상이므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고도성 등과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 중 어느 하나로 출원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더라도 귀사의 기술력의 우수성을 영업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보다는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5. 특허



39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저희 C사는 IT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특허출원 절차나 출원 후 특허권 취득 시까지 소요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하기와 같습니다.

1. 선행기술조사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 또는 고안을 완성한 후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하기 전에 간단하게 해당 기술이 이전에 존재하는지 검색해보는 것이 보다 좋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얻기 위해 바람직합니다.

2. 명세서작성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라고 판단되면, 발명 또는 고안을 그 분야에 속하는 평균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파악하여 구현가능 하도록 기재한 문서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명세서는 발명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특허사무소에 위임 가능합니다. 단, 명세서작성 작업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발명자 본인이 작성하기 보다는 변리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비용은 더 소요되지만, 기존 유사한 특허가 있을 경우 이를 회피하여 청구항을 작성해주는 것을 포함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특허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출원

작성한 명세서 및 출원서를 온라인 또는 직접 특허청으로 가서 접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출원하게 되면 접수증을 통해 출원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4. 심사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한 경우 보통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내지 2년 후에 심사관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심사결과인 의견 제출통지서를 송부하거나 등록결정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5. 등록 또는 의견제출통지서 등에 대한 대응

- (1) 심사결과 등록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등록절차를 밟게 되면 특허증 또는 실용신안증이 발급되며, 매년 재산세 개념의 연차료만 납부하면 유효하게 권리가 유지됩니다.
- (2) 심사결과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올 경우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데, 등록결정이 나오거나 거절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3) 거절결정된 경우에는 다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절차에서도 등록결정되지 않을 경우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하여 다시 등록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장)
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특허법 제63조(거절이유통지)
특허법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5. 특허



40 특허출원 시 대리인 선임여부

저희 D사는 IT기업인데, 아직 규모가 작아서 특허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당사는 변리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특허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당사가 직접 출원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지 문의합니다.

A 원칙적으로 변리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특허청에 직접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용이 들더라도 가치 있는 특허권을 갖고 싶다면 가급적 변리사를 통해 출원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주는 독점권으로 정의할 수 있어, 특허청에 제출된 명세서에는 기술공개문헌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내용이기 때문에 추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려면 특허청구범위가 잘 작성되어야 하는데, 비전문가가 작성하게 되면 가치 있는 특허권을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전문성 있는 출원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어 비전문가가 작성할 때 발생하는 기재불비 등으로 인한 거절결정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로 등록된 후 권리범위까지 고려하여 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출원명세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가 작성하는 경우 기술내용을 잘 알더라도 명세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명세서 미비로 인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보정범위가 매우 좁고 일단 출원되고 나면 신규사항을 추가할 수 없어 직접 특허출원한 후 이와 같이 거절된 후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시더라도 보정을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기술이라면 비용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질조성물 특허 출원 시 필요한 기술내용 및 데이터의 객관성 정도 41

저희 F사는 화장품회사입니다. 피부에 좋은 작용을 하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물질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해 특허를 내려고 하는데 기술내용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결과 데이터는 공증된 연구기관의 데이터만이 가능한지, 저희 회사의 연구결과데이터만으로도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A
해조류에서 추출한 물질이 피부에 좋은 작용을 하여 이것을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 출원대상이며, 구체적인 기술내용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물질이 신규한 경우는 물질발명이고, 신규한 물질이 아니라면 생산방법의 발명과 용도발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기술내용은 물질발명이라면 물질을 특정할 수 있는 구조식, 분자식, 분자량 등 각종 물리, 화학적 특성에 대한 내용을, 생산방법의 발명이라면 추출방법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용도발명이라면 추출된 물질이 무슨 효과로 인하여 피부에 어떠한 좋은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명세서 작성 시 발명의 내용 중 [효과]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제3자(특허청 심사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술한 효과에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된 개인적인 연구데이터가 관련 종사자가 봤을 때 수긍을 할 수 있는 수준 즉, 특허조성물의 효과를 입증하기 족한 실험데이터라면 그 정도로 서술해도 가능하고 반드시 공인된 인증기관의 연구결과 자료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특허



42 특허심사기간단축 및 연장제도

저희 E사는 식품소재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가 특허 출원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상 특허출원 후 등록 시까지 1년 6개월 내지 2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보다 짧은 기간에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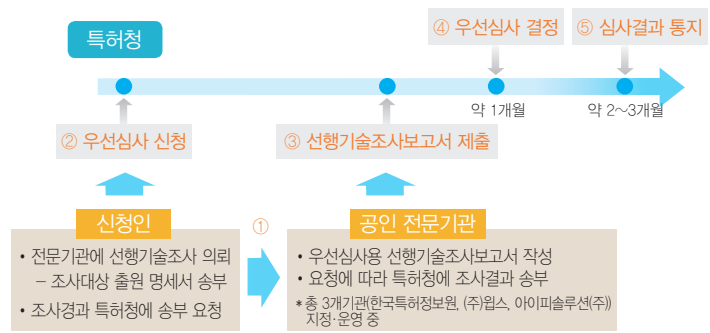
A 최근 우선심사제도가 확대된 빠른 심사제도를 통해 특허출원 후 3개월 이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0월 1일 이후부터 특허청은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처리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데,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란 ‘빠른 심사’, ‘일반 심사’, ‘늦은 심사’의 세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하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처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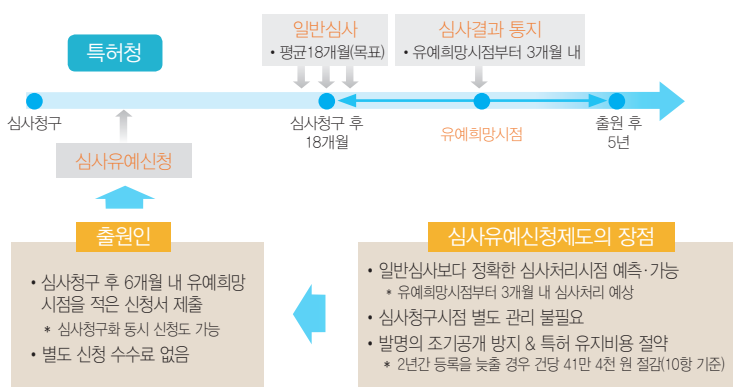
1. 빠른심사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하도록 요청하면 특허법에 규정된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우선심사를 포함하여 빠른심사를 신청하면 심사결과를 신청 후 약 2~3개월 늦어도 6개월 내에 처리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늦은심사

출원된 기술에 대해 특별한 이유로 늦은심사를 바라는 출원인을 위해 심사유예 신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내 심사처리 예상됩니다.

3. 일반심사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하여 특별한 조치 없이 심사받는 것입니다. 평균 18개월 내지 24개월 이내에 심사결과가 제공됩니다.

〈관련법령〉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



5. 특허



43 신규미생물의 보호방법

저희 H사는 종래에 없던 새로운 품종의 버섯을 개발하였는데, 저희 회사가 개발한 신규주를 특허로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A 귀사가 개발한 신규주를 특허출원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데, 개발된 신규주를 제3자가 용이하게 습득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에 규정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출원하기 전에 미생물기탁기관에 개발한 신규주를 기탁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출원만이 아니라 해외출원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기탁에 국내기탁하지 말고, 부다페스트조약이 인정하는 국제기탁기관에 국제기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국내기탁기관A에 기탁하여 국내 출원한 다음 해외출원을 위해 다시 국제기탁기관B에 국제기탁을 할 경우 기탁일이 국내기탁기관A에 기탁한 날짜로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출원시 국내출원일을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일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설치된 미생물 기탁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내기탁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물자원센터(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KACC)
- (2) 국제기탁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물자원센터(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서울의대 암연구소내 한국세포주 연구재단(KCLRF)

〈관련법령〉

특허법 시행령 제2조



외국 제품을 국내에서 특허출원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44

저희 B사는 일본에 출원되어 공개된 상태인 스티로폼 재활용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본에 출원되어 공개된 기술을 당사가 한국에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나요?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주는 독점권입니다. 그런데, 귀사가 출원하려고 하는 기술은 이미 일본에서 출원되어 공개된 상태이므로 새로운 기술이라 할 수 없어 한국에 출원하더라도 특허 등록될 수 없습니다.

A

즉,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일 전에 알려진 선행문헌과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 발명을 비교하여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심사관이 고려하는 특허출원일 전에 알려진 선행문헌의 대상이 국내에서 알려진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알려진 것까지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사가 사용하려는 기술이 일본에만 출원된 것이고 한국에 출원되지 않았다면 귀사는 특허권 침해의 우려 없이 일본특허기술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되는 선행문헌에 대해 이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으로 제한되던 것이 2013년 개정특허법에 의해 “모든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변경되어,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는 모든 문헌이 선행문헌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특허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문헌의 범위가 넓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5. 특허



45 특허출원을 위한 논문발표와 특허출원의 선후

저희 C사의 한 직원이 최근 생각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괜찮아서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하여야 특허출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출원된 특허가 등록받기 위해서는 고려할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특허를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주는 독점권이라고 정의할 때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해당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그 특허출원 명세서를 보고 해당 기술을 쉽게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재요건(특허법제 42조제3항및제4항)입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서에 그 기술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기재된 기술 내용을 보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안출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경렌즈에 김서림을 방지하는 아이디어를 특허출원하고자 할 때, 단순히 안경렌즈의 김서림을 방지하겠다는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출원할 수 없고, 김서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렌즈 표면에 특정된 성분이 포함된 조성물로 코팅을 하고, 실제 코팅한 안경에 김서림이 일어나지 않음을 실험한 실험결과까지도 기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법령>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품출시 또는 논문발표와 특허출원의 선후

46

논문을 발표하거나 제품을 출시했다라도 발표 또는 출시한 후 6개월 내에만 특허출원하게 되면 특허등록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지요?

A
알고 계신 것처럼 제품출시 또는 논문발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규성의예를 주장하여 출원하시게 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신규성의예)하여 국내에서 특허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된 2012. 3. 15. 이후 출원되는 특허출원부터는 신규성의예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신규성의예 기간은 6개월로서 FTA 발효 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국가마다 신규성의예로 인정받는 범위가 상이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 일단 논문이 발표되거나 제품이 출시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받을 수 없고, 중국의 경우 제품출시는 인정하지 않고 중국어 게재된 논문발표인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사가 제품출시 또는 논문발표 후 아직 출원 전에 제3자가 귀사가 공개한 기술내용을 근거로 먼저 출원하게 되면, 귀사가 신규성의예를 주장하여 출원하더라도 귀사의 출원이 제3자의 출원보다 늦은 출원이므로 가장 먼저 출원한 자의 특허가 등록될 수 있다는 선원주의에 따라 귀사는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제품출시 또는 논문이 발표되기 전에 특허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법령〉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5. 특허



47 특허청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대응방법

저희 G사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특허출원 전에 알려진 다른 기술로 인해 특허등록을 거절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A 일단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심사관이 지적한대로 선행기술과 귀사의 특허출원 기술이 유사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검토 결과, 거의 유사하거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더라도 그 차이로 인한 효과의 차이가 없다면 대응하셔도 특허거절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심사관의 의견과는 달리 선행기술과 특허출원 기술이 차이점이 명백하거나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차이로 인해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되시면 이러한 점을 부각시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등록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즉 통상 특허출원 10건 중 8~9건 이상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상술된 바와 같이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해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게 되면 그 등록 확률이 적어도 5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의견제출통지서 기간 내에 진행되는 보정절차에서 수회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데, 일정 기간까지는 심사관이 수회 제출된 모든 보정서를 고려하여 심사를 하지만, 2013년 개정특허법에 의해 2013.7.1.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는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을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제출된 보정서만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므로 수회 보정서 제출 시 이점에 주의하여 보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특허출원 후 제품출시 전 필수 고려사항

48

저희 사는 건축패널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당사가 개발한 기술을 특허출원한 후 출원된 기술을 근거로 제품을 완성하여 출시하려고 하는데, 제품출시 전에 특허와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A

특허 출원 후 출원된 기술을 근거로 제품을 실제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특허출원된 기술내용과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자는 실제 판매된 제품을 모방하여 침해품을 만들지 특허명세서 보고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제품출시 전에 특허 출원된 기술내용과 실제 제품의 기술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특허권리범위에 실제제품기술이 포함되는지를 판단해 보고, 벗어난다면 반드시 변경된 기술내용에 대해 국내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거나 신규 출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사 기술을 시리즈로 개발하실 경우에는 가능하면 최초 출원된 특허가 공개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이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동일 출원인(발명자)이 공개한 기술도 특허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문헌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특허법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5. 특허



49 국내출원을 근거로 하여 외국특허권을 취득하는 방법

저희 J사는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외국에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어 국내출원을 근거로 국내특허만이 아니라 해외특허를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A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이므로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은 국가마다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특허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기초로 한 개별 국가별 직접 출원절차

(1) 개별 국가별 직접 출원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내에서 영어로 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한국특허법률사무소에 해외출원의뢰 할 경우, 적어도 우선권 주장 마감일(국내출원일로부터 1년)로부터 2개월 전에 의뢰하여야 모든 진행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절차

한국특허법률사무소에 해외출원의뢰 → (필요 시)기 출원된 명세서 보정 → 영어로 번역(번역료를 절약하기 위해 일본, 중국출원 시에는 일어 또는 중국어로 국내에서 번역하기도 함) → 각 해당국 외국 대리인에 출원지시 → 각 해당 외국특허청에 해당국 대리인 출원 → 한국 대리인에 보고 → 한국 대리인이 한국출원인(의뢰인)에 대해 보고

2. PCT 국제출원에 의한 출원절차

(1)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절차적인 내용을 간소화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한국특허청을 지정관청으로 하여 PCT 국제출원 시 한국어로 출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권 주장 마감일(국내출원일로부터 1년)에 임박하여 해외출원을 결정한 경우 PCT 출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개별국에 진입하면 되므로, 발명의 특허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평가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므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구체적절차

한국특허법률사무소에 PCT 출원의뢰 → 한글 또는 영문으로 PCT 출원 → PCT 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 내에 국내 단계 진입국가 결정(적어도 28개월 이내에 결정되어야 각국 언어로 번역할 시간을 확보하여 원만한 출원절차의 진행이 가능함) → 이후 절차는 개별 국가별 직접출원절차와 동일함.

〈관련법령〉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특허법 제193조(국제출원)



5. 특허



50 특허권 침해 요건, 침해 유형 및 침해 시 구제수단

최근 저희 K사가 보유한 특허기술과 동일한 제품이 타사에 의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타사로부터 저희 회사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A 특허권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로 되어 있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실시란 특허기술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 특허권 침해 요건 : 하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1)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
- (2) 유효하게 존속하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기술이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실시(생산, 판매 등)되고 있을 것
- (3) 제3자에 의한 실시가 업으로서의 실시일 것
- (4) 실시자인 제3자가 특허권의 실시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2. 특허권 침해의 종류

- (1) 직접침해 :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2)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 : 권원 없는 제3자의 일정행위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지만 정차 특허권을 침해할 전단계로서의 형태를 가지는 실시행위를 법률규정에 의하여 침해로 의제한 것을 의미하는데 하기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①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②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특허권 침해 시 그 침해자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침해구제수단은 크게 민사적 구제수단, 형사적 구제수단, 행정적 구제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1) 민사적 구제수단 :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특허법 제126조 내지 132조)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 (2) 형사적 구제수단 :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자를 추궁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 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특허법 제225조, 제230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3) 행정적 구제수단 : 특허청은 특허침해에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술된 바와 같이 특허권침해 시 권리자가 침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해 드리지만, 특허권이 무효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일단 법적 조치를 시작하면 소송비용이 과하게 소요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즉시 소송을 하지 말고 먼저 합의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5. 특허



5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저희 L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타사를 대상으로 산업재산권분쟁 제도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문의합니다.

A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는 특허청에서 쟁송능력이 부족한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을 비롯한 영세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간이 중재·조정제도입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성의 특징, 대상, 절차, 신청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의 특징

- (1) 재판이나 심판에 비하여 신청절차가 간편함.
- (2) 신청비용을 무료로 처리함(단,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선임할 수도 있는 대리인, 감정인의 비용 등은 당사자 부담).
- (3) 비공개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므로 기업 비밀이 공개되지 않음.
- (4) 합의가 잘 될 경우 몇 년이 걸릴 사건이 단기간(2~3개월) 내에 해결될 수 있음.

2. 조정신청 대상

- (1) 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분쟁
 - ①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 ②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 ③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 ④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 (2) 조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분쟁
 - ① 조정신청일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 ②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와 권리범위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
 - ③ 기타 화해의 알선·조정을 하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절차

분쟁발생 → 신청서 제출 → 조정권고서 송부(피신청인) →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 담당조정부 구성(3인) → 분쟁사건의 조사연구 및 조정
안 작성 → 화해의 권고 → 조정안 수락 및 조정조서의 작성

4.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을 원할 때는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발명진흥법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발명진흥법 제43조(조정 신청 등)

발명진흥법 제46조(조정 성립 등)



5. 특허



52 실시권 설정

저희 M사가 제조,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허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특허권 침해 없이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합니다.

A

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특허권자로부터 해당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받게 되면 특허권 침해 없이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은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정한 전용실시권 범위 내에서는 당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2.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 권적인 권리로 봅니다. 따라서 동일장소(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권의 중복계약이 가능하며, 당해 권리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특정 제품에 대하여 각각의 통상실시권 계약도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특허법 제102조(통상실시권)



53

특허권 침해경고에 대한 대응방법

저희 O사는 상시 인원이 10인 미만인 소규모 회사입니다. 최근 당사가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 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합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는데, 특허권리범위 분석은 매우 전문적이고 난 해한 분야이므로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이후 조치를 위 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A

1. 먼저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의 경고인가, 특허권이 이전된 것은 아닌지,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하는 권리인 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유효하게 존속하는 권리의 정당한 권리자가 한 침해경고이면, 그 침해주 장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인지,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경고 또는 소송의 제기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3. 그 후, 침해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과 그 권리의 기술적 내용(특허청구범 위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침해주장에 대한 내용이 파 악되면 귀사 제품(이하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인지 즉 실제로 본 인이 실시하는 실시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4. 실시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면,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와 출원 시의 기술수준 등을 관련 문헌을 통하여 조사하고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무효주장을 할 것인지 아니 면 화해할 것인지 등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5. 특허



54 특허권이 압류대상인지 여부

저희 P사가 채권을 가진 회사가 폐업 직전인데 그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전하고자 특허권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특허권도 압류대상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A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도 압류대상이 됩니다.

한편, 특허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압류에 준하여 이루어지므로 특허권 등의 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제1차적 관할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다만,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을 때에는 압류할 채권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등록 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제2차적 관할 집행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224조 2항).

즉 권리의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관할은 등기,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는 규정(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2항)은 제2차적 관할에 관한 보충규정이므로 곧바로 등기,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인정의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권 압류로 인한 특허권자의 권리제한범위

55

저희 Q사가 채권을 가진 회사의 특허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된 특허의 특허권자는 어떤 제한을 받는지 문의합니다.

A
압류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은 특허권의 처분행위뿐이기 때문에 특허권 등이 압류된 후에도 채무자인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실시행위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된 뒤에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설정 또는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권의 소멸 그 밖의 사정으로 권리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96조).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특허청장에게 압류기입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141조).



5. 특허



56 특허의 이용관계 성립 시 적법한 실시를 위한 조치

저희 W사가 개발한 기술을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사의 등록된 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된 기술을 그대로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당사가 당사의 특허권을 적법하게 실시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문의합니다.

A 특허법 제98조는 자신의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이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실시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권리자는 선원권리자의 실시허락을 얻거나 통상실시권허여심판(특허법 제138조)을 통하여 자신의 특허권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선원권리자가 후원권리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도 후원권리자의 실시허락을 얻거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용관계는 특허와 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출원 간에 모두 적용됩니다.

〈관련정보〉

이용관계란 후원권리자가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선원발명을 침해하게 되나, 그 역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일방적 충돌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용발명이 성립하려면 하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선원발명의 구성요소를 전부 그대로 포함할 것
- ② 선원발명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가 부가되었을 것
- ③ 선원발명이 후원발명에 그 일체성을 유지하는 형태로 존재할 것이 인정될 것

판례는 선원발명과 동일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관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한 자유기술의 항변

57

저희 X사는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타사도 당사와 같은 제품을 수입하다가 제품 구성품 중 일부를 변경해서 특허를 등록하고는 저희에게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당사는 기존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특허권침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A
특허권침해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립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특정 제품이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또한 타사의 특허 출원 전에 알려진 기술과 동일한 기술인 경우에는 자유기술의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타사가 특허 출원하기 전부터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과 동일한 것이라면 타사가 개량된 제품을 특허 받았더라도 귀사의 기존 제품 판매행위는 타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즉 타사의 특허권은 기존 제품이 아니라 개량된 제품에 대해 성립된 것이고, 기존 제품은 자유 실시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변경되어 기존 제품과 상이한 것이라면, 현재 제품이 타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5. 특허



58 외국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저희 Y사는 얼마 전 일본에서 히터를 구입해서 외형이나 내부를 보고 유사하게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품 속의 부품이나 조작기판 등은 전혀 다른 제품을 사용했지만, 제품디자인이나 배선 등의 구조가 완전히 같기 때문에 이런 것이 특허법에 저촉되어 향후 국내영업활동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A 일단, 귀사가 일본에서 구입한 히터에 대한 특허 및 디자인이 국내에 출원된 후 등록되어 국내에서 유효한 특허권 및 디자인권으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결과, 상기 히터에 관한 기술 및 디자인이 국내에서 특허나 디자인 등록을 받지 않은 것이라면, 귀사가 국내에서 모방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또는 디자인에 대해 국내에서 등록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등록된 권리범위에 귀사의 모방제품이 속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침해가 된다면 침해가 되지 않도록 회피설계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관련정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검색 사이트 www.kipris.or.kr



수출제품의 특허권 침해여부

59

저희 A사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독일에 수출하였는데, 독일특허권
자로부터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당할 수 있나요?

특허권은 속지주의원칙입니다. 따라서 독일특허권자가 국내에 특허권을 갖고 있지 않고 독일에만 특허권을 갖고 있다면 귀사가 독일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특허권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도 독일특허권자가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귀사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사의 제품을 수입한 독일의 수입업체가 독일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에 근거한 권리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귀사와 독일수입업체 간에 귀사가 제조하여 수출한 제품에 특허권 문제가 있는 경우 귀사가 책임지기로 한 조항이 있으면 귀사 또한 특허권 침해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특허



60 개발아이템에 대한 기술자문 컨설팅

저희 N사는 기술벤처기업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술내용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기술내용을 언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개발아이템과 관련한 선행 특허 분석, 경쟁사의 출원현황, 분쟁의 미연 방지, 연구개발의 방향설정 및 개발아이템에 대한 기술자문 컨설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합니다.

A 구체적인 기술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요청하신 개발아이템과 관련한 선행 특허 분석, 경쟁사의 출원현황, 분쟁의 미연 방지, 연구개발의 방향설정 및 개발아이템에 대한 기술자문 컨설팅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하기와 같이 진행하시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1. 개발아이템과 관련한 선행 특허 분석

특허검색사이트를 이용해서서 선행 특허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일단 www.kipris.or.kr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유사기술이 있는지 확인해 본 후 유사기술이 발견되지 않으면 각국 특허청사이트(미국, 유럽, 일본)에 방문하여 추가적으로 검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경쟁사의 출원현황

경쟁사의 출원현황 또한 상술된 특허검색사이트에서 출원인 란에 경쟁사명 또는 경쟁사의 CEO 이름을 기입하여 검색하여 경쟁사의 출원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분쟁의 미연 방지 및 연구개발 방향설정

기술개발 시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기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를 회피하도록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발되어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경쟁사의 출원현황을 검색하고 검색된 특허의 등록여부 및 출원계속여부를 확인한 후 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출원이 포기되거나 취하된 것은 무시하고, 특허등록된 것과 아직 출원계속 중에 있는 특허의 내용을 귀사의 기술과 비교하여 분쟁의 우려가 있는지 검토한 후,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개발아이템에 대한 기술자문 컨설팅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 정확한 자료가 없어 적절한 자문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키워드로 특허검색 가능하면 특허동향조사를 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므로 헛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 기술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성 조사, 더 바람직하게는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방향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특허검색 등을 통해 얻어진 선행기술자료로부터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된 기술에 귀사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디자인출원, 상표출원 등을 통해 독점 배타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폭넓은 권리확보를 위한 방어출원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특허



61 특허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저희 S사는 특허출원을 통해 다수의 특허권을 확보하기는 했으나, 아직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허를 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해 문의합니다.

A 기업에서 보유한 특허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점이 제고되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1. CEO의 특허마인드

CEO의 특허마인드란, 타회사의 기술을 존중하고 그 기술에 관련된 특허로 인해 자기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함을 인식하는 것 즉,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이므로, 회사를 경영하는 CEO의 특허마인드가 없으면, 특허의 질적 향상은 물론 양적 향상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특허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경영자가 가져야 하는 특허마인드는 지적재산권획득 및 관리라는 항목의 예산을 책정하여 투자하겠다는 의지일 것입니다.

2. 특허전담부서의 설치 또는 강화

회사에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전담부서 또는 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 규모에 따라 단 1인이더라도 타업무와 겸임을 하지 않는 전담요원을 구축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사에서 특허업무의 중요성을 누구도 인식하지 않을 뿐더러, 관심을 갖지 않게 되므로 특허의 질적향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구축 또는 적절성 제고

회사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면, 당장 그것을 구축하여야 하고, 이미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설치하고 있는 회사라면, 그것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는지 또한, 보상체계가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적절한 것인지 등을 체크하여 그 적절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4. 신성장동력 아이템 발굴, 기술 개발 및 특허취득

(1) 새로운 개발 아이템 선정

기술개발에 임하기 전에 선정된 아이템이 과연 미래 성장동력이 될 만한 것인지 과학적으로 판단하여 아이템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선정된 아이템에 대한 특허동향조사

아이템이 선정되면 기술개발에 본격 투자하기 전에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아이템의 개발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며 특허를 회피할 개연성은 있는 것인지, 개량 발명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결정된 아이템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

관련 특허정보를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그 아이템에 대한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하여야 합니다.

(4) 기술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발명에 대한 특허취득

기술개발과정에서 도출된 발명, 또는 개발되어야 할 발명 등을 발굴하고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5. 발명의 평가 및 등급화

발굴된 발명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 시장친화성 등을 기초로 하고 발명의 질적인 요인을 참작하여 평가하고 그 등급을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 국내 및 해외출원이 필요한 발명인지, 국내출원만 필요한 발명인지, 특허출원이 불필요하고 공개시킬 발명인지 또는 노하우로 간직할 발명인지 등으로 등급화하여 분리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특허출원비용 및 발명자의 보상체계도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특허

6. 적극적 권리획득 및 활용도에 따른 보유여부 결정

특허출원이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권리가 필요한 발명을 선택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특허획득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일단 등록된 특허라 하더라도 매년 그 활용도를 체크하여 중요도를 등급화하고 보유여부를 결정하여 회사에 꼭 도움이 되거나 보유할 가치가 있는 특허만을 보유하게 되면 연차료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과감한 특허영업

특허를 취득하는 목적은 원칙적으로 그 특허 자체로 회사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특허 이외의 보유 특허에 대해서는 과감한 특허영업(라이선싱 또는 매도)을 통해 특허 자체가 회사의 자산임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 이러한 특허영업을 통해 CEO의 특허마인드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8. 좋은 대리인(변리사)의 선정 및 신뢰형성

대부분의 지적재산권 관련업무는 변리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자신의 회사에 적합하면서도 우수한 업무수행능력을 갖는 변리사의 선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즉 변리사의 전공, 경력 등을 검토하여 회사의 아이템과 접합한 변리사인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한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임료를 지불하고 변리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회사에 이익입니다.



62

특허성조사와 특허동향조사의 차이점

저희 T사는 최근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특허동향조사 또는 특허성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허동향조사와 특허성조사는 어떻게 다른지 문의합니다.

특허성조사는 특정된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 시 특허로 등록될지 여부를 알기 위해 선행문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특허동향조사는 특정 기술이 속하는 기술분야 전체에 대해 선행문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인데, 핸드폰을 예로 들어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즉, 특허성조사는 휴대폰에 있어서, “A라는 기술로 휴대폰을 열고 닫는 방법 및 장치”와 같이 특정된 기술만을 조사하여 특허출원 시 특허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고,

특허동향조사는 휴대폰에 관한 모든 것(커버, 안테나, 버튼, 전송방식 등)을 처음자료부터 최근자료까지를 검색하여 각 기술 분류별로 정리, 분석함으로써 향후에는 각 기술 분야들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각 기술 분야에서 공백기술로 남아 있는 부분은 어느 분야인지 그리고 어느 회사가 어떤 기술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특허성조사보다는 특허동향조사를 수행하게 되면 귀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특허



63 신기술인증과 특허의 차이점

저희 V사가 최근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신기술인증을 받게 되면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및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신기술인증제도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지식경제부의 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합니다.

신기술인증을 받게 되면 국가 및 공공기관구매지원, 자금지원, 중소기업청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조세지원, 기술지도 등의 여러 가지 특혜가 존재합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주는 독점권으로서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여 특허성을 인정받게 되면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특허 등록된 기술을 특허권자가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신기술인증과 특허는 전혀 다른 것으로 양자를 병행하게 되면 재산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신기술인증만을 받고 특허를 등록받지 않게 되면 개발타인이 개발한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특허권까지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정보〉

신기술인증은 www.netmark.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상표

10년 동안 사용한 상표를 타인이 상표 출원한 경우 대처 방법 64

저희 D사가 수입 판매하던 주방용품브랜드인 상표A를 특허청에 출원하려고 할 때 타인이 상표A와 동일한 상표를 특허청에 이미 출원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표A가 사용된 주방용품을 저희 회사가 수입 판매한지 10년이 넘는 상황에서 타사의 선출원에도 불구하고 상표A에 대한 상표권을 당사가 확보할 수 있는 대처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타인의 출원상표가 아직 등록된 상태가 아니므로 타인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한 다음, 저지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일단 귀사의 상표출원을 진행한 다음, 이미 출원된 타인의 상표가 출원공고 결정되면 이의신청을 하여 타인의 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여 귀사가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상술된 바와 같이 귀사가 이의신청을 통해 타인의 상표등록을 저지하려면 적어도 귀사의 상표가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대해 주지성을 확보하였거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로서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법 제25조(상표등록이의신청)



6. 상표



65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방법

저희 E사는 현재 “조아”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상표출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검색해 보니 JOAFOOD라는 등록상표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상표 출원하여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 E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 현재 귀사가 출원하고자 하는 “조아”라는 상표와 등록된 “JOAFOOD”는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여 출원해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반드시 “조아”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싶다면 등록된 “JOAFOOD”를 취소시키거나 무효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상표무효심판 : 상표법상 등록무효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상표권의 효력을 상표법이 규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또는 그 사유 발생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하는데, 상표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무효사유를 찾을 수 있다면 무효심판을 통해 상표를 무효시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귀사가 출원하여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것으로 상표를 일정기간(3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의무 해태의 책임을 물어 상표권을 취소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JOAFOOD”가 당업계에서 지금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JOAFOOD”란 상표를 취소시키고 귀사가 “JOAFOOD”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 출원권을 가지고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표법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절차

66

저희 F사는 서울 소재 의류기업입니다. 당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등록된 상표를 취소시키고자 합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나요?

A 먼저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동종업자가 아니라 취소시키고자 하는 상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취소시키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상표출원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와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취소시키고자 하는 상표의 취소사유를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2. 특허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를 송달받고, 취소시키고자 하는 상표의 상표권자는 상기 상표의 취소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내에 사용증거를 제시하거나 사용증거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3. 취소심판청구인은 이러한 상표권자의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는 심판사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상표권자(피청구인)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심판사건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일정기간(통상적으로 9개월 내지 1년)이 지난 후, 심판부가 양 당사자의 주장을 근거로 상기 상표를 취소할지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결을 내리게 됩니다.
 - 상표권자가 적절한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상표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심결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독점적인 출원권을 갖습니다.



6. 상표



67 상표권자의 정당한 사용

당사가 등록받은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하여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상표가 등록되면, 제3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상표권자는 본인이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받은 상표 그대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자가 등록받은 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하게 되면 정당한 상표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상표법 제52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표의 등록 여부

68

당사의 상표(서비스표) 등록 출원을 위하여 검색조사를 하던 중에 상품류 분류표(1~45) 전체를 대상으로 상표등록 출원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GS라는 상표가 전체 상품류를 대상으로 출원되어 등록받았는데 GS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업과는 전혀 상관없어 현재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상표마저도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상표출원은 해당 상표를 해당 상품에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출원할 수 있도록 규정(상표법 제3조)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 당시에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면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사단계에서는 일단 출원이 있으면 사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등록을 허용하지만, 등록을 받고서도 일정기간(3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는 불사용취소심판제도(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를 통해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6. 상표



69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대한 제재 방법

저희 G사는 외국 유명 브랜드 의류에 대한 한국독점에이전시입니다. 미국 유명 브랜드를 수입하는 병행수입업자들이(물론 병행수입 자체는 합법입니다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브랜드명, 로고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A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이른바 버버리 판결을 통해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선전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된 상태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예를 들면 외부간판, 명함 등에 사용하는 경우)처럼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단지 온라인 쇼핑몰로 운영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운영현황을 보아야 할 것이나 영업표지로서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국내 공인대리점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규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상표가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만한 로고(창작의 정도에 따라 저작권으로 행사할 수도 못할 수도 있음)라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권리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등록된 영문상표를 중문으로 표기하여 출원된 중국 상표에 대한 제재 방법 70

저희 H사는 중국에 영문과 한글을 병기하여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가 유사한 상표를 중문으로 출원하였는데, 이의 제
기 가능한가요?

A 중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한글, 영문, 중
문은 문자나 발음이 달라 서로 다른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
라서 이의제기는 가능하지만 상기 중국업체의 상표등록을 저지하기는 어려
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중국 출원 시에는 영문 상표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별도의 중문상
표도 같이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상표



71 상표출원의 대상

홀로그램이나 동작상표도 상표로 출원되어 등록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해 2007년 7월 1일부터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상표법 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출원대상이 되며 상표법에 규정된 다른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면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의 타결로 인해 소리, 냄새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상표출원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상표법 제2조(정의)



상표의 우선심사

72

당사가 출원한 상표를 가능한 빨리 등록받을 필요가 있는데 상표도 우선심사가 가능한가요?

“우선심사”란 출원의 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상표 우선심사제도는 2009.4.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선심사 신청 대상은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서비스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와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정보〉

우선심사신청료는 1상품류마다 160,000원입니다.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는 1상품류마다 3만 원을 제외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표법 제22조의4(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상표법 시행령 제2조의4(우선심사의 대상)



7

디자인



73

디자인 출원 시 실제제품의 존재 여부 및 제품판매 후 디자인 출원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저희 사는 칫솔살균기 제조기업입니다. 당사가 디자인 출원을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제조된 제품이 있어야만 가능한지, 그리고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다음에도 디자인 출원하여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A

디자인 출원 시 실제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디자인의 경우 일단 출원이 이루어지면 도면에 대한 일체의 정정이 불가하므로 확정된 디자인은 필요합니다.

즉, 출원 시에 제출한 도면과 실제 생산 단계에서 제품의 디자인이 변경되면 앞서 출원한 디자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생산할 확정된 샘플이 나오거나 최소한 3D 도면이 나온 후에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귀사가 제조한 제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제3자가 알게 된 상태이더라도 제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귀사가 판매된 제품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의를제를 주장하여 디자인 출원하게 되면 이미 판매된 제품에 의해 신규성이 부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디자인보호법 제8조(신규성상실의 예외)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가처분결정 후 권리자의 법적 조치

74

현재 저희 J사는 당사 소유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하여 가처분결정서를 받았는데, 피신청인은 여전히 대상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결정 된 지 1주가 넘었는데 피신청인은 항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가처분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신청인은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사의 경우, 일단 가처분결정서의 신청취지대로 이행해 줄 것을 집달관에게 요청해야 하는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의 방법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원 집행관실에 있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집행관이 집행일자를 알려 줄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일자에 집행관과 시간 약속을 하고 집행에 임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권 침해한다는 결정을 받고서도 피신청인이 침해제품을 계속 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고의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도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디자인



75 공유디자인권의 공유자의 실시범위

저희 K사는 디자인권을 L사 및 M사와 공유로 취득하였는데, L사 및 M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당사가 등록된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A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3항은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디자인권자인 L사, M사 및 귀사 사이에서 취득한 등록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취득한 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각 공유자는 공유 지분과 무관하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디자인보호법 제46조(디자인권의 양도 및 공유)



디자인 침해판단 범위

76

저희 N사는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디자인 권자가 파는 물건과 저희 제품은 디자인이 다른데도 디자인 침해인가요?

A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및 유사한 디자인까지 미칩니다.

따라서, 실제로 디자인권자가 파는 실물과의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따지게 되므로, 설령 디자인권자의 실시제품과 귀사 제품의 디자인이 다르더라도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있다면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다만, 침해판단은 극히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법령〉

디자인보호법 제41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보호법 제4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7. 디자인



77 디자인 침해 시 법적 조치

저희 O사는 다기능 방한 모자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디자인과 동일한 제품이 시중에서 다수 유통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합니다.

A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디자인 침해금지를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제조자를 확인하고, 제조자가 동일하면 소송비용의 절감을 위해 제조자만을 대상으로 디자인권을 근거로 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제조자가 동일하지 않고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할 때는 판매자를 대상으로도 디자인권을 근거로 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모든 판매자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특정 업체를 표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법령〉

디자인보호법 제62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디자인보호법 제64조(손해액의 추정 등)

디자인보호법 제65조(과실의 추정)

디자인보호법 제82조(침해죄)



폰트 다운로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78

인터넷 상에서 폰트를 다운받아서, 그 폰트를 자신의 그림에 넣고 그 그림을 공개된 사이트(카페라든지, 개인 블로그 같은 곳)에 업로드 할 경우에 소송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나요?

폰트 즉, 글자체는 저작권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A

따라서, 귀사가 다운로드 한 폰트가 디자인 등록된 것이라면 디자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7. 디자인



79 도용된 디자인이 디자인 출원된 경우 구제 방법

저희 P사는 약세사리 제조업체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에 당사에서 디자인한 제품의 생산의뢰를 하면서 완성된 디자인파일을 하청업체에 건네주었는데, 그 업체는 5개월에 걸쳐 샘플 제작을 하면서, 저희 회사와 상의도 없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습니다. 당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일단, 하청업체가 귀사의 디자인을 그대로 출원(모인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귀사(귀하)로 명의변경 또는 양도할 것을 요청해 보시고, 해 주지 않을 경우 모인출원을 근거로 하청업체의 출원을 거절 또는 무효화시킨 후 정당권리자인 귀사에서 이를 다시 출원하여 권리화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의 모인출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하청업체에 디자인한 제품의 생산의뢰를 하면서 귀하가 고안한 디자인파일을 송부하였고 하청업체는 이를 토대로 디자인을 출원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디자인보호법 제1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8 저작권 기타

책 속에 다른 책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80

저희 Q사는 영재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영재원, 학급 등 영재교육관련리스트 및 각종 영재교육 관련된 정보가 담긴 책을 기획하여 출판하고자 하는데, 참고문헌으로 기재하면 저작권침해가 아닌가요?

책 속에 다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참고문헌으로 기재한다하더라도 인용하는 양 등에 따라 저작권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다면, 저작권은 사상이 아니라 표현형식이 보호되므로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동일하지만 다른 표현방법으로 서술하거나, 미리 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8. 저작권 기타



81 회사 홈페이지에 회사를 취재한 기사 또는 사진을 업로드 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당사의 홈페이지에 당사에 대해 취재된 기사나 사진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침해인가요?

A 귀사를 대상으로 취재된 기사 또는 사진이라 하더라도 기자에 의해 작성된 기사 및 사진은 저작물로 성립하고 당연히 저작권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귀사 홈페이지에 신문기사 또는 사진 등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회사홈페이지에 신문기사, 사설, 사진 등을 업로드 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직접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가 되도록 하면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도형캐릭터의 보호 방법

82

저희 R사에서 새로운 도형캐릭터를 창작하였는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캐릭터는 도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을 하시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캐릭터의 이름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캐릭터를 상품화하려면 캐릭터뿐만 아니라 캐릭터 이름까지도 상표로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상품화할 대상물품이 확정되었다면 디자인등록출원을 병행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8. 저작권 기타



83 번역 위탁 작업 시 번역자의 법적 지위

저희 S사는 외국어로 된 콘텐츠를 소유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 돈을 주고 번역위탁작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번역자가 번역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A 외국어로 된 콘텐츠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현명·야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되므로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번역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이라면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번역자의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올려야 한다면 법인의 명의로 공표하고 계약서상에서 2차적저작권자로 권리행사하지 않을 것을 규정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합법적인 저작물이용 방법

84

저희 O사는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출판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합법적인 저작물이용이 가능한 방법 및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용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A

1. 인용

(1) 신문기사·기고문·칼럼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을 두고 있는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이용 가능합니다.

- ①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②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 ③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 (2) 기고문 작성 시 나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문기사 또는 책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언론사가 보도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하여 관련 영상 등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CCL마크(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제도임)가 부착된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즉 저작권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8. 저작권 기타



3. 자유이용사이트이용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서는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 기증된 저작물 등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사이트에서 검색 후 이용 가능합니다.

4. 링크

현행법상 '단순링크'와 '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프레임링크', '임베디드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홈페이지에 신문기사, 사설, 사진 등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므로, 홈페이지에 신문기사, 사설, 사진 등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직접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가 되도록 하면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85

저작권등록의 효력

저작권은 특별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저작물 완성 시에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저작권등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저작권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A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과 권리의 변동 등에 대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으로 저작물의 창작일 등을 추후 입증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등록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정력

- (1)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함(저작권법 제53조)
- (2)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입증책임의 전환)(저작권법 제125조)

2. 대항력 : 권리변동 등 등록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부여

3. 보호기간의 연장

- (1)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경우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 (2) 미공표 단체명의 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 후 70년에서 공표 시 기준으로 70년까지 연장

4.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취득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실 등을 신고하여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



8. 저작권 기타



86 소프트웨어의 보호 방법

저희 T사는 금융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개발하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일정요건 하에서 특허의 보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독자적으로 완성한 것이면 특허와는 달리 특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완성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에서 프로그램저작물로 등록하시면 제3자와 다툼이 발생한 경우 창작 일 입증이 용이합니다.

또한, 개발하신 프로그램이 장치와 결합되어 물리적인 작용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특허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한 불법복제물로 인한 문제

87

저작권법을 잘 몰랐을 때 업로드 한 불법복제물을 현재 삭제한 상태인데 저작권법에 위반된 것인가요?

저작권법을 알고 모르고의 여부를 떠나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A

다만, 현재 불법복제물을 삭제한 상태라는 전제에서 살펴보면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어, 삭제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형사고소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8. 저작권 기타



88 지적재산권매매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곳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지적재산권 매매는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판단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자체가 어렵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구매자가 나타나면 간단한 일이지만, 구매자는 자기에게 맞는 지적재산권을 구입하기 어렵고, 지적재산권 보유자는 구매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매매할 수 있는 인터넷기술거래장터로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의 기술거래장터(www.ipmart.or.kr) 등이 있기는 하지만, 귀사의 특허 또는 상표권에 관심을 표하는 업체 또는 관심을 가질 만한 업체를 찾은 후 직접 접촉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전자우편을 통한 판촉 시 사용된 저작물이 저작권 권리행사 제한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89

당사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품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판촉을 위한 메일만을 보내는 경우에는 수령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정보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귀사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다수인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는 것은 저작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범주 내에 있지 않는 행위로서 저작권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A

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다)'를 규정하고 있지만, 귀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귀사의 경우 판촉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어 즉, 판촉문을 읽게 하려는 간접적인 영리목적이 있으므로 비영리목적이어서 한다는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귀사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한 전자우편은 개인적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8. 저작권 기타



90 공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제공업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가능한지 여부

국내 통신망에 올려져 있는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

A 통신망에 올려져 있는 공개된 소프트웨어의 법적지위에 대한 상황에 따라 저작권 침해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통신망에 올려져 있는 공개된 소프트웨어는 불법적으로 올려진 상용 소프트웨어, 셰어웨어, 프리웨어, 공유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법적지위를 가진 소프트웨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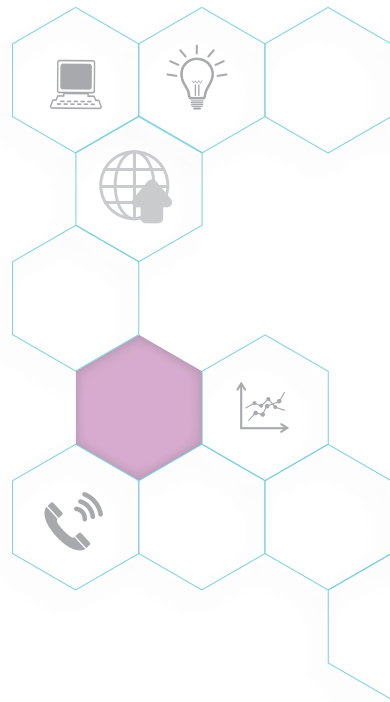
각각 살펴보면, 먼저 불법적으로 올려진 상용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셰어웨어는 일정기간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가 아니어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역시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프리웨어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함을 저작권자가 표시한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허용한 자유로운 이용의 범위에 따라 침해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대체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정보제공까지 허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역시 저작권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종료되거나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권리를 포기한 공유 소프트웨어나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정보제공이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귀사와 같이 정보 제공에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www.bizinfo.go.kr





현장클리닉

1. 특허기술이 갖는 중요성
2. 불량 원인 제거를 통한 생산성 향상



특화기술이 갖는 중요성

삼창파이프는 고강도 파이프 제조기업으로 2010년 9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간 재 활용 자원을 통해 녹색산업으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기술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나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삼창파이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서정태 지도사는 파이프 제조 방법 선행기술 분석 및 제조방법, 특허기술, 정보제공,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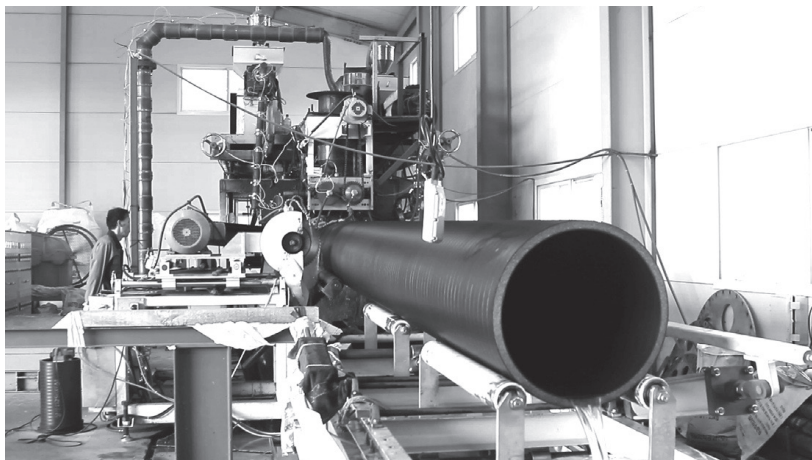
우선 삼창파이프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특허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행되고 있는 기술 파악 후 본인들의 기술과 비교해 다른 점을 발견, 특허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하여 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달청 등록은 쉽지 않았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특허기술, 녹색기업 인증 등 여러 자격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의 하나로 삼창파이프의 기술발굴을 실시하여 자신들의 기술과 선행기술을 비교함으로써 기술발굴을 이뤄냈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스틱 폐자재를 이용한 4층 플라스틱 흡관 제조방법, 두 번째는 플라스틱 폐자재를 이용한 보강 타입 3층 플라스틱 흡관 제조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기술은 특허 출원 진행을 위해 특허법률 사무소에 자료를 제공하였고 기술에 대해 더 보강한 뒤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폐 플라스틱자재를 사용한 4층 플라스틱 흡관 제조방법과 나사형 3층 플라스틱 흡관 제조방법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 및 현장제조공정분석을 통해 기술발굴 차별화를 이뤄냈고 녹색기업인증 등을 통해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을 진행, 조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 속	전문가명	e-mail 주소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서정태 기술지도사	coachock@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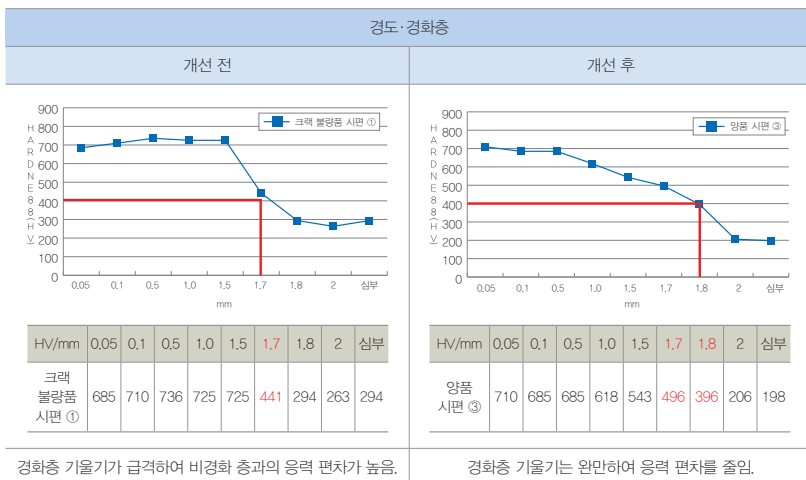
불량 원인 제거를 통한 생산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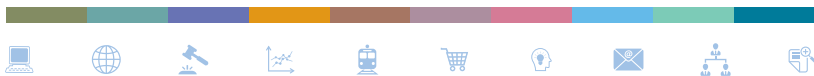
A회사는 자동차 부품 유도경화 열처리 회사입니다. 최근에 고객사로부터 의뢰받은 부품에 크랙이 발생되어 원인 분석이 필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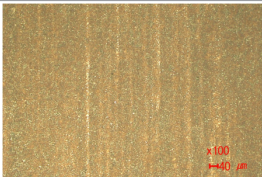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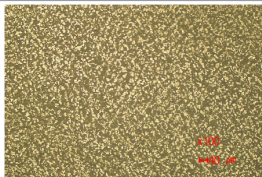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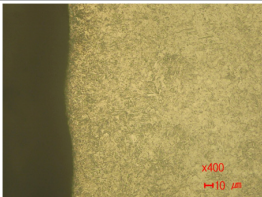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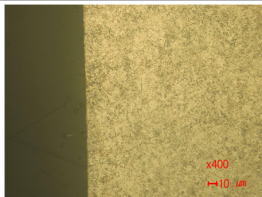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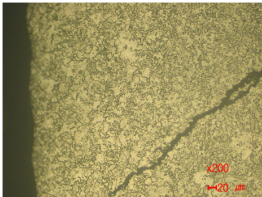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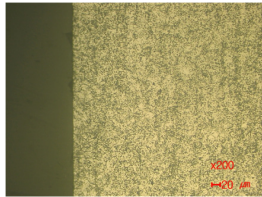


Crack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자 첫째, 유도 경화 열처리 조건과 현상을 파악하고 둘째, 표면 경도와 경화층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현미경 조직 분석 및 입도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애로 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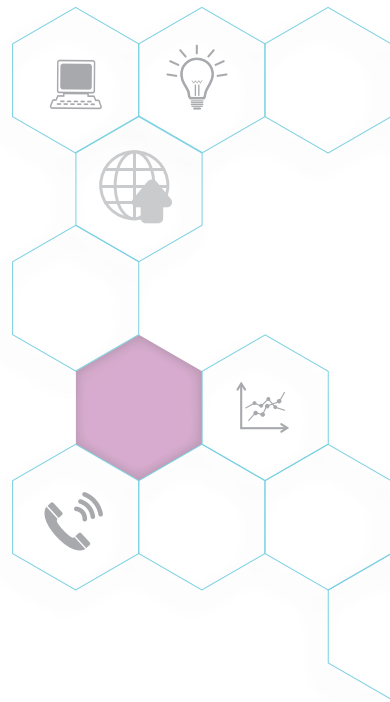
크랙 발생품은 원주 방향 경화 경계부에 크랙이 발생되었으며, Crack은 밴드 상 조직 및 Metal Flow를 따라 시작된 것으로 경도 추이는 양품 보다 크랙 발생품이 경계 부위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보아 유도 가열 시 가열 온도가 적합품 보다는 높고 가열 유지 시간 없이 바로 냉각된 것으로 Normalizing 조건이 맞지 않아 Bend상 조직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분석되어 Normalizing 조건 개선, 유도자와 제품과의 거리 유지, 유도 가열 온도를 기존보다 낮게 관리함으로써 경화층을 부드럽게 하고 응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개선 효과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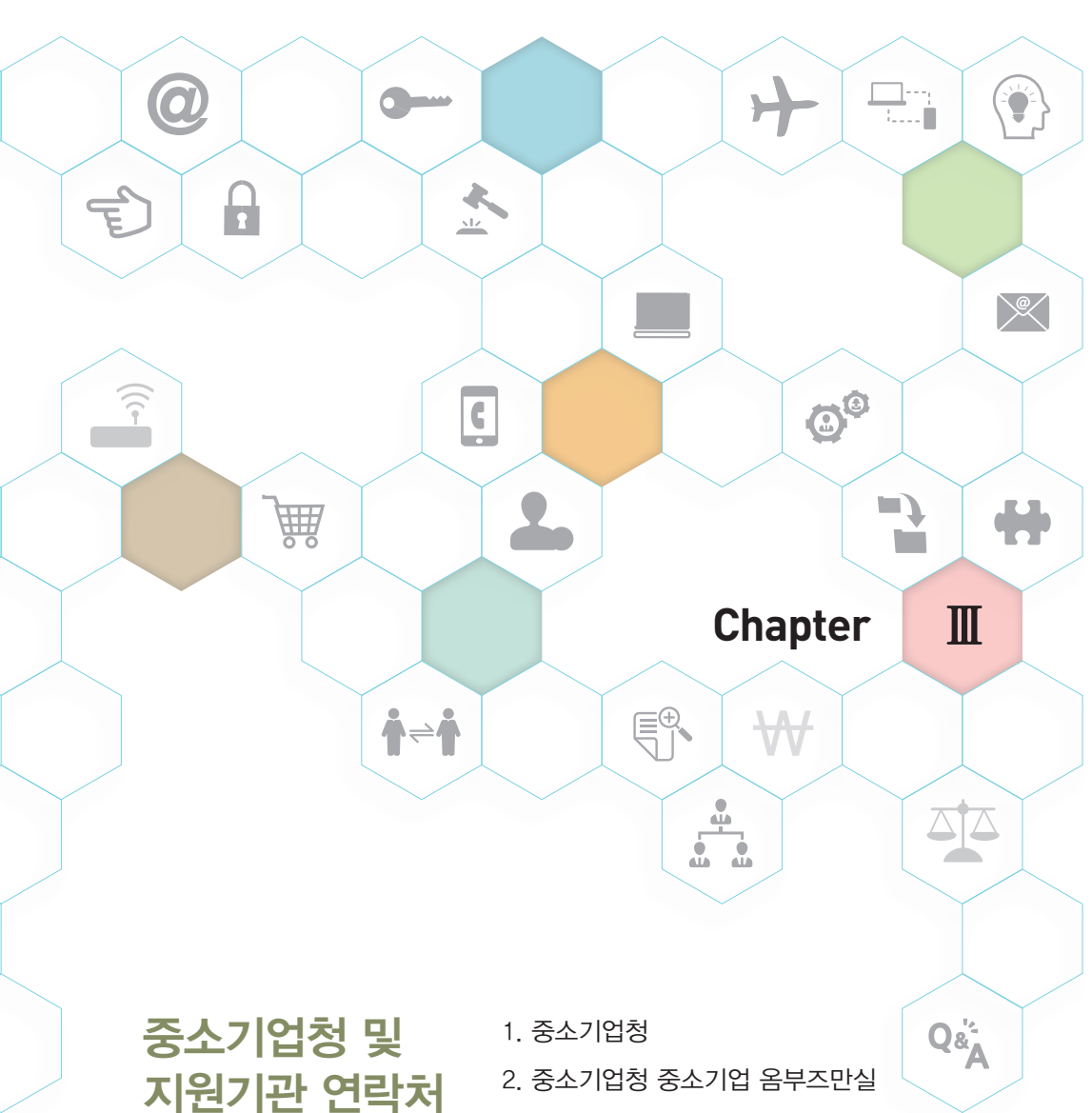


현미경 조직		
개선 전	개선 후	
		
불균일한 밴드 조직	균일한 표준 조직	
		
침상 Martensite 조직	미세한 Martensite 조직	
입도		
개선 전	개선 후	
		
크랙 발생품이 양품에 비해 입도가 크며 입도 혼란됨 (AGS 4,5)	입도 미세함(AGS 7,8)	
제품 외관		
개선 전	개선 후	
		
크랙 발생	크랙 원인 도출에 따른 개선으로 크랙 발생 없음	
소 속	전문가명	e-mail 주소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해동 기술사	mastco@hanmail.net



www.bizinfo.go.kr





중소기업청 및 지원기관 연락처

- 1. 중소기업청
- 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 3. 지방중소기업청
- 4.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5. 중소기업진흥공단
- 6. 중소기업중앙회
- 7. 지역신용보증재단
- 8. 중소기업 지원기관

Q&A



중소기업청 및 지원기관 연락처

1. 중소기업청

☎ 1357 www.bizinfo.go.kr

부서명	전화	팩스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청장실	042)481-4309	042)472-3252
차장실	042)481-4312	042)472-3255
대변인실	042)481-4492	042)472-3264
감사담당관	042)481-4340	042)472-3266
운영지원과장	042)481-4350	042)472-3310
인사	042)481-4358	
서무	042)481-4480	
용도	042)481-4313	
자료관실	042)481-3975	042)472-3261
기획조정관	042)481-4301	042)472-3269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4570	
행정법무담당관	042)481-8911	042)472-3276
고객정보화담당관실	042)481-8934	042)472-6083
비상계획담당관실	042)481-4370	042)472-3292
중소기업정책국장	042)481-4550	042)472-7929
정책총괄과	042)481-4507, 8948	
규제영향평가과	042)481-4336, 3985	042)472-3272
기업협력과	042)481-4484	042)472-7932
국제협력과	042)481-4482, 4493	042)472-3293
소상공인정책국장	042)481-4532	042)472-6958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68, 3950	
중소기업사업조정T/F	042)481-4368	042)472-5641
소상공인지원과	042)481-3954, 4495	042)489-2961
시장상권과	042)481-4562, 4574	042)472-7935
창업벤처국장	042)481-4303	042)472-3282
벤처정책과	042)481-4428, 4426	
벤처투자과	042)481-4578	042)481-4418
창업진흥과	042)481-4497, 3967	042)481-3972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4525, 8909	042)472-3428



부서명	전화	팩스
경영지원국장	042)481-4302	042)472-3275
기업금융과	042)481-4376, 4375	
인력지원과	042)481-4398, 4395	042)472-3278
공공구매관리과	042)481-4575, 4546	042)472-3294
기술혁신국장	042)481-4304	042)472-3287
기술정책과	042)481-4440, 4573	
녹색성장팀	042)481-4496, 4508	
기술개발과	042)481-4448, 4451	042)472-3289
기술협력과	042)481-4450, 4460	042)472-3291

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02)2110-4900	02)2110-4941
(110-755)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5층		

3. 지방중소기업청

구분		전화	팩스
서울청	서울청장	02)2110-6301	02)2110-0661
	창업성장지원과	02)2110-6314	02)2110-0661
	공공판로지원과	02)2110-6320~8	02)2110-0662
	수출지원센터	02)2110-6330~6	02)2110-0663
	기업환경개선과	02)2110-6341~7	02)2110-0666
	기술혁신지원과	02)2110-6360~5	02)2110-0665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1동		
부산 · 울산청	부산·울산청장	051)601-5101	051)341-4905
	창업성장지원과	051)601-5114, 5157	051)334-4333
	공공판로지원과	051)601-5123~6	051)335-4334
	수출지원센터	051)601-5165~6	051)341-0364
	기업환경개선과	051)601-5133~5	051)335-4335
	제품성능기술과	051)601-5137~8	051)341-4204
	시험연구지원팀	051)601-5144-8	051)341-4204
	울산사무소	052)283-0350~1	052)283-0354
	(618-819)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송정동 1633-1)		



중소기업청 및 지원기관 연락처



구분		전화	팩스
대구 · 경북청	대구·경북청장	053)659-2202	053)626-2604
	창업성장지원과	053)659-2205, 2210	053)624-3656
	공공판로지원과	053)659-2233~8	053)627-0194
	수출지원센터	053)659-2241~2	053)626-8771
	기업환경개선과	053)659-2211, 2264	053)654-1714
	제품성능기술과	053)659-2293, 2288	053)625-0117
	시험연구지원팀	053)659-2509	053)592-2604
	(704-833) 대구시 달서구 성서 4차 첨단로 132(월암동 1111)		
광주 · 전남청	광주·전남청장	062)360-9116	062)366-1955
	창업성장지원과	062)360-9113	062)366-1922
	공공판로지원과	062)360-9145, 9147	062)362-6229
	수출지원센터	062)360-9191~4	062)366-9671
	기업환경개선과	062)360-9133~5	062)366-9662
	제품성능기술과	062)360-9151~2	062)366-9163
	시험연구지원팀	062)360-9161~2	062)366-9669
	제주시험연구센터	064)723-2101~3	064)723-2107
	(502-72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2길 14		
경기청	경기청장	031)201-6900	031)201-6919
	창업성장지원과	031)201-6911, 6909	031)201-6919
	공공판로지원과	031)201-6938, 6934	031)201-6939
	수출지원센터	031)201-6945~6	031)201-6949
	기업환경개선과	031)201-6954~8	031)201-6959
	제품성능기술과	031)201-6974~5	031)201-6969
	(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인천청	인천청장	032)450-1101	032)818-7469
	창업성장지원과	032)450-1110, 1122	032)818-8366
	기업환경개선팀	032)450-1140, 1142	032)818-0206
	수출지원센터팀	032)450-1132~3, 1135	032)818-8364
	제품성능기술과	032)450-1159, 1154	032)818-8339
	시험연구지원팀	032)450-1163	032)818-8363
	(405-849)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34(논현동 445-1 30B/1L)		



구분		전화	팩스
대전 충남청	대전·충남청장	042)865-6101	042)865-6119
	창업성장지원과	042)865-6125	042)865-6199
	수출지원센터팀	042)865-6150~1	042)865-6159
	기업환경개선과	042)865-6100	042)865-6139
	제품성능기술과	042)865-6135~6	042)865-6149
	시험연구지원팀	042)865-6142	042)865-6169
	충남사무소	041)564-2282-6	042)564-3855
	(305-343)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유성구 장동 23-3)		
강원청	강원청장	033)260-1702	033)260-1619
	창업성장지원과	033)260-1600, 1614	033)260-1619
	수출지원센터팀	033)260-1671~3	033)260-1679
	기업환경개선팀	033)260-1621~4	033)260-1629
	제품성능기술과	033)260-1636, 1632	033)260-1639
	시험연구지원팀	033)260-1641~6	033)260-1659
	(200-9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청	충북청장	043)230-5303	043)235-2492
	창업성장지원과	043)230-5358, 5326	043)235-2492
	수출지원센터팀	043)230-5371~2	043)235-2494
	기업환경개선팀	043)230-5310, 5321	043)235-2492
	제품성능기술과	043)230-5331~3	043)235-2493
	시험연구지원팀	043)230-5313, 5346	043)235-2493
	(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전북청	전북청장	063)210-6401	063)210-6429
	창업성장지원과	063)210-6412~7	063)210-6421
	수출지원센터팀	063)210-6485~6	063)210-6489
	기업환경개선과	063)210-6432~5	063)210-6460
	제품성능기술과	063)210-6441~5	063)210-6449
	시험연구지원팀	063)210-6451~6	063)210-6429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중소기업청 및 지원기관 연락처



4.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지방청	전화	팩스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2110-6330	02)2110-0663	(427-724)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5~6	051)341-0364	(618-270)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1~2	053)626-8771	(704-833)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월암동 1111번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360-9191~4	062)366-9671	(502-200) 광주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201-6944~6	031)201-6949	(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865-6150~1	042)865-6159	(305-343)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450-1132~3	032)818-8364	(405-849)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5-1 (은봉로 3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260-1671~3	033)260-1679	(200-944)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230-5371~2	043)235-2494	(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210-6485~6	063)210-6489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5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268-2543	055)262-5012	(641-06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광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064)723-2101~3	064)723-2107	(690-130)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

5. 중소기업진흥공단

구분		주소	전화 및 팩스
본부		(150-71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Tel. 02)769-6700
지역 본 (지) 부	서울서부	(150-72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기업유통센터 사무동 14층)	Tel. 02)6678-4127 Fax. 02)6678-4198~9
	서울북부	(150-7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중소기업진흥공단 9층 서울북부지부)	Tel. 02)769-6816 Fax. 02)769-6838



구분	주소	전화 및 팩스
지 역 본 (지) 부	서울동남부 (137-88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Tel. 02)2156-2200 Fax. 02)2156-2209
	부산서부 (617-800)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Tel. 051)630-7400 Fax. 051)646-0516
	부산동부 (612-050)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백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Tel. 051)712-9670~7 Fax. 051)712-9669
	대구 (702-010)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3길 9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Tel. 053)601-5300 Fax. 053)601-5301
	경북 서북부 (730-350)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7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2층)	Tel. 054)476-9311 Fax. 054)476-9319
	경북동부 (790-8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Tel. 054)223-2047~8 Fax. 054)223-2049
	경북남부 (712-210)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Tel. 053)212-3300~1 Fax. 053)212-3305~6
	인천동부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Tel. 032)450-0500 Fax. 032)442-3236
	인천서부 (404-841) 인천광역시 서구 검바위로 46 (코레일공항철도빌딩 1층)	Tel. 032)450-0560 Fax. 032)450-0580
	광주 (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Tel. 062)600-3000 Fax. 062)956-7518
	전남서부 (530-83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061)280-8000 Fax. 061)280-8080
	전남동부 (540-330)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20 (그린법조타워 5층)	Tel. 061)724-1066 Fax. 061)724-1057
	대전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Tel. 042)8660-114 Fax. 042)8660-149
	충남 (330-981) 충청남도 천안시 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Tel. 041)621-3687 Fax. 041)621-3689
	울산 (680-81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Tel. 052)703-1100 Fax. 052)703-1190
	경기 (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A동 503호)	Tel. 031)628-6888 Fax. 031)628-6899
	경기서부 (429-450) 경기도 시흥시 만해로 49	Tel. 031)496-1081 Fax. 031)496-1080
	경기북부 (410-72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Tel. 031)920-6700 Fax. 031)920-6789
	경기남부 (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1층)	Tel. 031)259-7900 Fax. 031)259-7901~2



중소기업청 및 지원기관 연락처

구분		주소	전화 및 팩스
지 역 본 (지) 부	충북남부	(361-80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043)230-6800 Fax. 043)230-6888
	충북북부	(380-963)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Tel. 043)841-3600 Fax. 043)841-3619
	전북동부	(561-84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Tel. 063)210-9900 Fax. 063)210-9988
	전북서부	(573-870)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31 (대한생명빌딩 4층)	Tel. 063)460-9800 Fax. 063)460-9888
	경남중부	(641-2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Tel. 055)212-1350 Fax. 055)212-1360
	경남동부	(621-905) 경남 김해시 구지로46 (KT&G빌딩 1층)	Tel. 055)310-6600 Fax. 055)310-6677
	경남서부	(660-844)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1 (바이오21센터 벤처지원동 201호)	Tel. 055)756-3060 Fax. 055)756-3068
	강원영서	(200-042)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Tel. 033)259-7600 Fax. 033)256-9614
	강원영동	(210-703)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사 15층)	Tel. 033)655-8870~6 Fax. 033)646-9960
	제주	(690-0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064)751-2055 Fax. 064)751-2058
연수원	안산(본원)	(425-78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Tel. 031)490-1472 Fax. 031)490-1116
	호남	(500-150) 광주광역시 북구 잔등동 125-2	Tel. 062)250-3000~2 Fax. 062)250-3077/8
	대구·경북	(712-100)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	Tel. 053)819-5001~2 Fax. 053)819-5050
	부산·경남	(645-48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473번길 22	Tel. 055)548-8045~6 Fax. 055)548-8081

6. 중소기업중앙회

구분	주소	전화 및 팩스
본부	(150-740)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02)2124-3114 Fax. 02)786-9492
서울지역본부	(121-904)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E타워 17층)	Tel. 02)761-7991 Fax. 02)761-6425
부산·울산지역본부	(611-83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빌딩 6층)	Tel. 051)637-2061 Fax. 051)637-2066



구분	주소	전화 및 팩스
대구·경북지역본부	(700-310)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268-5 (드림피아 3층)	Tel. 053)524-2110 Fax. 053)524-2117
인천지역본부	(405-8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26 (한국토지공사 2층)	Tel. 032)437-8705 Fax. 032)437-8708
경기지역본부	(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층)	Tel. 031)259-7800 Fax. 031)259-7810
경기북부지역본부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 203호)	Tel. 031)851-0164 Fax. 031)851-2862
광주·전남지역본부	(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Tel. 062)955-9966 Fax. 062)951-9966
강원지역본부	(200-944)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70-3 (강원도향토공예관 3층)	Tel. 033)241-0010 Fax. 033)241-0015
충북지역본부	(361-80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Tel. 043)236-7080 Fax. 043)236-7084
대전·충남지역본부	(302-86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47번지 2층	Tel. 042)864-0901 Fax. 042)864-0902
전북지역본부	(561-73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Tel. 063)214-6606~9 Fax. 063)214-5166
경남지역본부	(641-96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중소기업지원센터 401호)	Tel. 055)212-1177 Fax. 055)212-1170
제주지역본부	(690-7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064)752-8576 Fax. 064)757-5673

7.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단명	주소	전화 및 팩스	홈페이지
중앙회	(302-280)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12~15층	Tel. 1588-7936 Fax. 042)480-4007~9	www.koreg.or.kr
강원재단	(200-041)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80 (제일은행 3층)	Tel. 033)251-1353~5 Fax. 033)251-1356	www.gwsinbo.co.kr
경기재단	(443-766)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07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3층)	Tel. 031)259-7700 Fax. 031)259-7777	www.kgsb.co.kr
경남재단	(641-2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내 4층)	Tel. 055)212-1250 Fax. 055)212-1275	www.gnsinbo.co.kr
경북재단	(730-350)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7 (경북경제진흥원 7층)	Tel. 054)474-7100 Fax. 054)474-7104	www.gbsinbo.co.kr
광주재단	(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Tel. 062)950-0011 Fax. 062)950-0063	www.kjsinbo.co.kr



중소기업청 및 지원기관 연락처

재단명	주소	전화 및 팩스	홈페이지
대구재단	(704-954)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Tel. 053)554-6300 Fax. 053)554-9905	www.ttg.co.kr
대전재단	(301-722)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Tel. 042)380-3800 Fax. 042)380-3898	www.sinbo.or.kr
부산재단	(611-08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5층)	Tel. 051)816-6050 Fax. 051)816-4551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21-80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8	Tel. 02)563-1400 Fax. 02)2174-5279	www.seoulshinbo.co.kr
울산재단	(683-80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3층)	Tel. 052)289-2300 Fax. 052)289-8964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405-8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 센터9층)	Tel. 032)260-1503 Fax. 032)260-157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540-951)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	Tel. 061)729-0600 Fax. 061)729-0608	www.jnsinbo.or.kr
전북재단	(560-04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주상공회 익소 1층)	Tel. 063)230-3352 Fax. 063)230-3388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690-802) 제주시 연북로 33, 4층 (KT&G 제주본부 4층)	Tel. 064)758-5740 Fax. 064)758-5748	www.jejusinbo.co.kr
충남재단	(336-813)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Tel. 041)541-3800 Fax. 041)541-983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361-8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5층)	Tel. 043)249-5700 Fax. 043)236-2695	www.cbsinbo.or.kr

8. 중소기업 지원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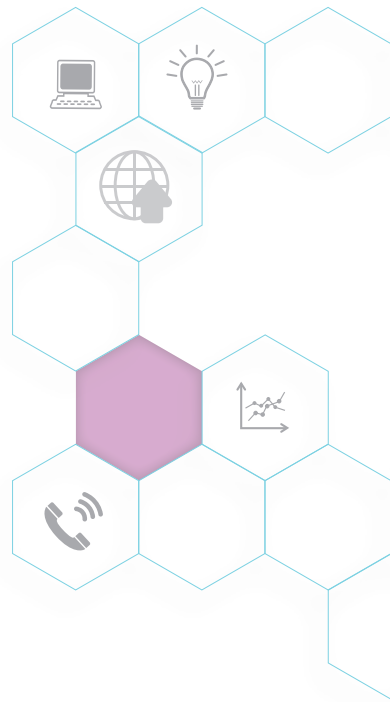
구분	대표전화	홈페이지
신용보증기금	1588-6565	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	1544-1120	www.kibo.or.kr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00	www.innobiz.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100	www.tipa.or.kr
(사)한국산학연합회	042)720-3300	www.sanhak.net
중소기업유통센터	02)6678-9000	www.sbdc.co.kr
벤처기업협회	02)890-0600	www.venture.or.kr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569-8212~3	www.kgcca.or.kr
한국벤처투자(주)	02)2156-2000	www.k-vic.co.kr
(사)창업진흥원	042)480-4300	www.iked.or.kr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042)256-1070	www.kmcca.net



Contact



구분	대표전화	홈페이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00	www.womanbiz.or.kr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www.debc.or.kr
소상공인진흥원	1588-5302	www.sbdc.or.kr
전국상인연합회	02)2264-6800	www.fkm.or.kr
시장경영진흥원	02)2174-4338	www.sijang.or.kr
한국무역협회	1566-5114	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지원단	02)3779-6114	www.koreaexim.go.kr
KOTRA 중소기업글로벌 지원센터	02)3460-7495	www.kota.or.kr
한국산업은행	1588-1500	www.kdb.co.kr
기업은행	1566-2566	www.ibk.co.kr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www.ksure.or.kr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00	www.win-win.or.kr
신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02)6050-3853~6	www.sppm.korcham.net



www.bizinfo.go.kr





Chapter IV

집필진 소개

Q&A

집필진 소개

www.bizinfo.go.kr

기술 · 특허



강 순 식

- 기술사, 기술지도사, 기술거래사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 새롭경영자문(주) 이사
- 군산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겸임교수
- E-mail : kangsl12@hanmail.net



김 미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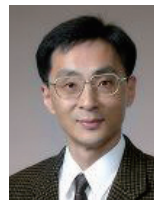
- 변리사, 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 변리사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시스템 평가전문위원
- E-mail : mrk@iampatent.com

감수



이 영 속

- 공학석사
-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 E-mail : yslee@smba.go.kr



정 수 봉

- 공학석사
-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
- E-mail : first@smba.go.kr